

시민행복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기관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권역의 혁신기술산업분야 상생발전 방향
대전·세종의 상생적 협력차원의 복지·여성정책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협력 문화적 가치 공유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대전·세종의 도시안전 현황과 정책방향
대전-세종 상생발전을 위한 교통현황과 개선과제
대전·세종의 공동 지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환경정책 제언

기획특집

대전세종연구원이
나아갈 방향-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협력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시민행복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기관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 연구 수행

DAEJEON
SEJONG
FORUM

글로벌 도시정책 연구

-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모델 창안
- 국제적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연구역량 확보

적실성 높은 시정연구

-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개발
- 시민참여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 대전세종 상생발전모델 설계

열정과 창의를 조직 혁신

- 윤리경영 확립
- 신뢰와 소통의 조직 문화 확산
 - 경영관리시스템 혁신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59호

대전세종포럼

제 59호

대전세종연구원이 나아갈 방향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협력

Contents

- 05 대전-세종권역의 혁신기술산업분야 상생발전 방향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1 대전·세종의 상생적 협력차원의 복지·여성정책
이연복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35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협력 문화적 가치 공유
이춘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 55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이건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69 대전·세종의 도시안전 현황과 정책방향
임윤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85 대전-세종 상생발전을 위한 교통현황과 개선과제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95 대전·세종의 공동 지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환경정책 제안
정환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권역의 1장 혁신기술산업분야 상생발전 방향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권역의 혁신기술산업분야 상생발전 방향¹⁾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AEJEON
SEJONG
FORUM

I. 머리말

대전-세종권역은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새로운 발전(성장)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 수도권과 경부 축에 집중되었던 성장모델을 향후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세종권역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축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경제분야 가운데 구체적으로 혁신기술산업분야에 있어서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세종권역의 첨단R&D 역량의 결집과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기초과학 R&D기반을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 사업화의 역량을 확보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형태의 국가 성장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전-세종권역 내의 다양한 분업화된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분야 발전에 관하여 논의되어온 선행 연구·계획을 검토하고, 대전-세종권역의 산업경제분야에 관한 SWOT분석에 기초한 상생발전 해법을 도출하는 한편 혁신기술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실현가능한 여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본 내용은 대전과 세종 양 도시간에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분야들을 중심으로 종전에 필자를 포함한 여러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성한 바 있는 중부권메갈로폴리스 구성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Ⅱ. 세종-주변지역간 산업경제분야 발전을 위한 선행 연구·계획 검토

1.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현 시점에서 추진 동력을 다소 상실한 계획이기는 하지만 충청권 경제를 큰 권역으로 구분하여 처음으로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계획이 바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다. 이 계획은 광역경제권간 상생 발전하는 초광역사업과 광역권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자립적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비전은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New HEART’로 설정하고 충청권이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을 선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산업경제분야의 특징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충청권 선도·전략산업 신융합(New Combination), 충청권 신발전지역 공동 육성 등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충청권을 부품·소재산업권역, 메카트로닉스산업권역, 바이오산업권역, 신재생에너지산업권역, 첨단과학산업권역 등의 산업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첨단과학산업권역은 대덕과 세종시를 연구개발과 비즈니스의 허브(Hub)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 충청권의 세부 권역별 특화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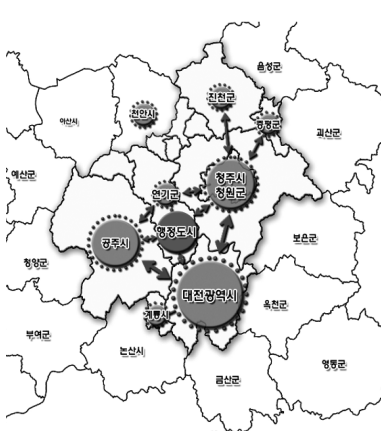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2009.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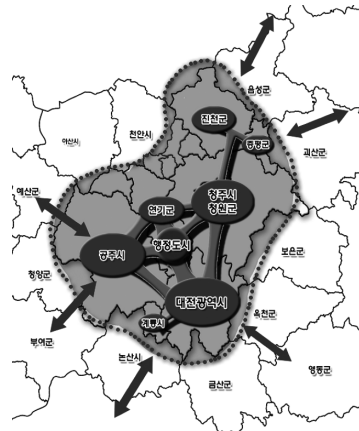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충청권에 국토균형발전 선도거점을 구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광역적 도시계획의 필요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세종시와 주변 9개 지자체(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를 묶어 인구 400만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이 단순히 지역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국가의 국제적인 기능과 광역적인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대전, 충북을 제외하고 세종시와 인접 충남지역과의 도시거점별 기능배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세종시에 부여된 기능 가운데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 눈여겨 봐야 할 내용은 국가· 국제기능으로서의 국제교류, 연구개발과 지역기능으로서의 CT, IT분야이다.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도시거점별 기능배분 설정

구 분	국가· 국제기능	광역기능	지역기능
세종시	중주행정, 국제교류, 연구개발	행정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레저	CT, IT, 교육· 의료· 복지
천안시	113,117	문화· 관광· 레저	ET, 첨단농업, 교육· 의료· 복지
공주시	문화· 관광· 레저	CT	국제교류, 첨단농업, 교육· 의료· 복지
계룡시	군사· 국방	IT, 문화· 관광· 레저	행정지원서비스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구조 개편방향



〈그림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2030년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3. 세종특별자치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에 관한 전략수립(2008~2030)

본 계획의 수립 배경은 행정도시 건설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들의 경쟁력 확보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근도시과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본 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광역권(행정도시와 인근 도시)의 역할 모델 설정, 인근도시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세종시 광역도시권 형성을 전제로 권역 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주요거점을 하향적으로 선정하고 배분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 ② 사업의 유형을 성장동력산업(충청과학산업밸리 클러스터 조성), 공동협력사업, 격차해소 및 갈등관리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10개의 중점과제를 토대로 상생발전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산업경제분야 관련 사업은 1-4의 중점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표 2〉 행정도시와 상생발전전략의 사업유형과 중점과제

사업유형	중심 과제	사업비
성장동력사업 : 충청과학산업밸리 클러스터 조성 사업	1. 동북아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 허브 구축	15개 세부사업 9조 6,290억
	2. R&D 산업화 지원	
	3. 충청과학산업밸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4. 미래형 신산업 인프라 구축	
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행정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8개 세부사업 7조 7,113억
	6.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 SOC 확충	
	7. 금강 유역권 공동 개발	
격차 해소 및 갈등 관리 사업	8.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지자체 지원	12개 세부사업 7,393억
	9. 주변 농촌지역 발전 촉진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지원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2006~2030)

본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급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살기 좋은 인간중심 도시, 품격 높은 문화·정보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특히 2단계(2015~2020년) 사업기간 동안 인구 30만인을 목표로 대학·의료복지·첨단 지식 기반 등 각종 도시 자족기능이 운영되고 도시성장이 본격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3단계(2020~2030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인구 50만인을 목표로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복합형 자족도시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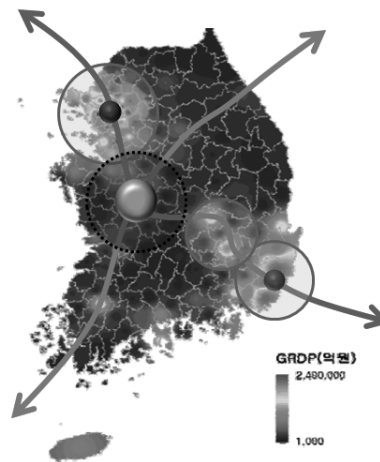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존의 성장한계 극복을 위해 기초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신개념의 국가성장거점 조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거점지구 조성, 기초연구 환경 구축, 과학비즈니스 환경 구축 등 3대 정책부문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대전광역시 신동·둔곡지구, 능자지구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청원군을 결정하고 발표(2011.05.16)하였다. 특히 능자지구의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능자지구별 학·연·산 연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Ⅲ. 대전-세종권역의 산업경제분야 관련 SWOT 분석에 기초한 협력방향

1. SO 전략

우선 먼저 대전-세종권역을 국가의 새로운 발전(성장)축으로 형성하며, 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수도권과 경부 축에 집중되었던 성장모델을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세종권역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축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간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세종권역의 첨단R&D 역량의 결집과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를 전개해 나간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기초과학 R&D기반을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 사업화의 역량을 확보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형태의 국가 성장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대전-세종권역 내의 분업화된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거점지구로서 대전이 국가의 기초과학연구 및 미래 성장동력의 거점으로서 고급 기초과학 인력의 육성, 글로벌 정주환경 구축, 기초연구성과의 확보 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능지구인 세종시는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상용화시키고, 비즈니스 활동 및 각종 금융지원 등이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글로벌 도시권을 형성하도록 한다. 대전-세종권역의 성장이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스피로버(Spill-over)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등 국내 타대도시권과의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규모중심의 거대 경제집적지 형성보다는 네트워크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대전-세종권역의 혁신역량이 주변 광역경제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3〉 대전-세종권역 육성을 위한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SO전략)

기본 방향	새로운 발전 축 형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강화
세종	대전, 청주, 청원, 천안, 공주 등과 연계한 도시성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중앙행정 파워를 활용한 영향권 확대 핵심도시권역의 중심지 역할 고급인력을 활용한 주변지역과 기능연계 및 상생발전방안 모색 	기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성장동력 창출 중부권 광역교통 및 물류 허브기능 수행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대전	세종시와의 기능연계 및 분담을 통한 도시성장동력 확충 청주청원권과 협력을 통한 대도시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의 모도시 역할과 상생발전을 위한 생활서비스 제공 및 지원 광역교통네트워크의 강점 극대화하여 활용 외부적 영향에 의한 발전보다는 내부역량 결집 	거점지구 (신동/둔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덕특구 기초과학 공동R&D지원과 주변 지역 개발활성화 첨단 과학기술 인재육성 중이온가속기와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

2. ST 전략

대전-세종권역의 지역 자원들이 서로 연계되어 전체적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양 도시간의 협력체계와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종은 국가의 중추행정기능을 효율화하고,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과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은 고급 인적자원의 정주기반과 생활환경 지원을 확대하고, 주변지역과의 교류활성화는 물론, 선진형 복지문화서비스 기반 확대 등을 권역내의 산업경제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권역내에 네트워크형 지역정주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고급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유입 확대와 이들의 정착유도를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대전-세종권역의 사회문화적 통합과 차별화된 정주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화 말해서 핵심도시권과 배후지역 간 문화적·역사적 동질성 확보, 네트워크형 공간체계 활성화와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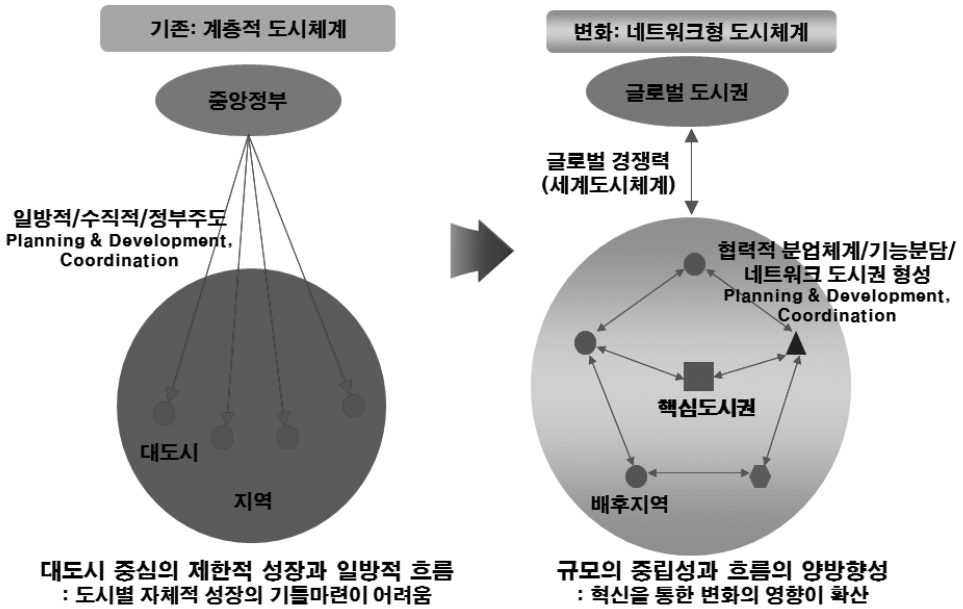
〈표 4〉 대전-세종권역 육성을 위한 강점요인 활용 및 위협요소 제거전략(ST전략)

기본 방향	대전-세종권역간 상생발전체계 구축	
세종	국가행정중심지 육성과 주변 영향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중심권 형성과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 과학벨트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기반 구축 ▪ 광역교통인프라를 활용한 주변지역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대전	고급인력의 정주기반 확대와 주변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 도시생활 서비스 기능 제공 ▪ 주변 중소도시권과 기능분담체계 구축 및 차별화 ▪ 과학커뮤니티 활성화와 첨단기초과학 역량강화

3. WO 전략

대전과 세종이 도시별로 차별화된 전문화 실현을 위해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 나간다. 또한 혁신을 통한 변화의 영향이 주변도시권에 확산되도록 하며, 핵심도시권과 배후도시들 간의 상호협력과 상호보완을 통해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창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 및 지역간 규모의 면에서 중립성을 지향하고 지역간에 도시발전 흐름의 양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steering)의 역할이 중요하다. 향후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도시권 형성보다는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도시권을 지향하고, 내부적으로는 협력적 분업 체계 및 기능분담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간의 집합적 이해조정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의 형성이 선행되도록 해 나간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목표설정에 따른 역할분담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는데, 먼저 세종시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생활환경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지역들과 네트워크형 도시권 구축을 위한 전략적 허브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대전-세종권역 주변의 핵심도시권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허브, 첨단과학과 산업의 연결허브, 정보교류 및 인력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



〈표 5〉 대전-세종권역 육성을 위한 약점요인 보완 및 기회요인 활용전략(WO전략)

기본 방향	대전-세종권역의 차별화된 핵심 도시권역 육성	
세종	국제적 수준의 생활환경 구축과 관련 서비스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주변 지역들과 네트워크형 도시권 구축을 위한 전략적 허브 역할 세종시의 자족성 및 생활서비스 기반을 주변도시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육성
대전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중심도시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부권의 광역교통망 지원을 통해 권역 내 정보교류 및 인력교류 활성화 과학과 산업 연결허브 역할강화 주변지역에서의 중부권 문화관광권으로 이어주는 허브 역할 강화

4. WT 전략

대전-세종권역의 대규모 단위 공생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광역 네트워크의 이점 극대화과 인구 저성장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기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여기에서 대전시는 도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인적자원의 공급과 지식기반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세종시는 제2의 수도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인접 중남부 주변 지역 주민들간의 동질감 확보와 함께 주변 도시들과 선의의 협력적 경쟁을 위해서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표 6〉 대전-세종권역 육성을 위한 약점요인 보완 및 위협요소 제거전략(WT전략)

기본 방향	대전-세종권역의 정체성 확립과 네트워크 효율화	
세종	세종시 주민들의 동질감 확보와 주변지역과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변 도시 공동대응 ▪ 행정중심도시 및 제2의 수도권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 세종시 정상건설에 따른 주변도시 영향권을 감안 세종시 네트워크 도시권 설정
대전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중심도시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거점지역 자원 간 연계 활성화 네트워크 채널 형성 ▪ 지식서비스업, 첨단지식제조업 육성 ▪ 인적자원 양성의 중추기능 담당

IV. 대전-세종권역 혁신기술산업분야 발전전략

1. 협력적 R&D 기능 강화

1) 첨단산업기술 융·복합 메카 육성

대덕을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중이온가속기 활용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R&D기술분야의 융·복합지원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융합기술 개발 및 융합기술 관련 정보교류, 융합포럼 운영, 산·학·연·관 네트워크 조성 등의 사업을 집중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한 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BT, IT, NT, 로봇, 항공우주, 국방, 의료 등 첨단 지식산업간 융합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융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융합기술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동의 사업을 협력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또한 권역내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첨단융합기술 이전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 등을 협력해서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대전-세종의 선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융합기술연구원 내에 첨단 융·복합기술 상용화센터를 설치하고, 첨단 융·복합기술분야의 기획력을 확보하고 권역내에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을 연계하여 예컨대 융·복합 Seed 연구 지원, 융합기술지도(Converging Technology Map) 작성 등 첨단 융·복합기술 상업화를 위한 지원활동도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

2) 지역기반 과학기술시스템 구축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전-세종권역의 차별적인 도시 인프라와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한다. 예컨대 환경, 에너지, 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문에서의 과학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주체 및 시민 과학기술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지역기반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의 한가지 방식으로 권역내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 기획, 조사,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대전세종도 시기반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차원 R&D 사업의 기획·심의를 담당하는 '과학기술 정책 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과학기술 정책기획위원회'는 지역 산학연 혁신주체, 연구개발지원 기구(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본부, 각 기관 사업화센터 및 TLO, 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지역차원의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사업전개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간의 네트워크 커뮤니티(커넥트(CONNECT))을 강력하게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대덕특구 출연연, 지역대학, 기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간의 인적 재정적 연계·협력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권역내 각 연구기관 간 연구원 파견, 재정적 교류, 정책 기획 및 추진에 있어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2. 전략적 산업 특화

1) 선도산업, 특화산업 육성

대전-세종권역만의 독특한 산업특화 노력이 요구되며 전략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한가지 예로서 지역 내 선도산업 기업과 특화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R&D 개발 지원 및 연계 인프라의 구축, 성장단계 기업의 공동입지, 공동기반시설,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권역내의 선도 전략산업간에 교차 입지를 위한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기존의 각종 R&D 설비의 교환, 활용, 연계 생산품 시험, 인증 등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연계 제품의 우선 구입, 각종 정책자금의 우선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지원 등 광역적으로 기업간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내 특화전통산업에 대한 고도화 및 연계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권역내 특화사업에 대한 경영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권역내 기업애로 해결 One-Stop서비스 운영을 모색해 나간다. 그리고 권역내 상품 우선 구매 지원, 공동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 각종 박람회 공동 참가, 전략적 해외시장 공동 개척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2)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대전-세종권역내의 유망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시제품생산,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혁신 각 주기별 사업을 공동으로 집중 지원한다. 또한 각각의 기술-산업군별로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자문 및 장·단기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3. 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산업정보망 공동구축

대전-세종권역내 기업간 협력과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종합산업정보망 구축, 분야별 전문인력, 고가기자재, 기술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활용해 나간다. 이를 위해 공동 협력사업으로 ① 분야별 전문 산업정보망의 구축과 네트워크화 추진 ② 지역산업 정보의 표준화 및 권역내 통합 경제정보센터 구축 ③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전자상거래지원센터 공동 구축 ④ 대전-세종권역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 지원 ⑤ 공동의 전문인력 풀(pool)제의 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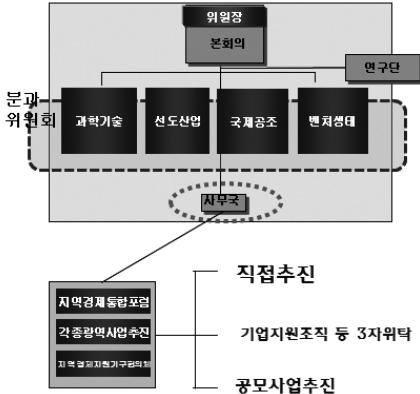
이 가운데 공동의 전문인력 풀제의 도입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전-세종권역 공동으로 전문기술 분야의 인력 정보망을 구축하고, 인적 자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전문인력 중개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해 나간다. 그리고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교수, 지역산업계의 대표, 정부기관 등 명망가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기업을 운영 중이거나 기술개발 및 생산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한다.

2)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권역내의 협력적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세종권역내 기업 간 협력과 제휴를 촉진을 견인해 나가고 이를 위해 공동의 종합 산업정보망 구축, 분야별 전문인력, 고가기자재, 기술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반드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세종권역에 지역경제통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대전-세종권역 중소기업지원기관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각 지원기구간에 통합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보공유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

경제통합 추진위원회의



심의기구
지역경제통합
추진위원회

- 기능 및 역할**
- 지역경제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된 기본 계획 및 정책의 심의
 - 기업지원 조례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심의
 - 기업지원 사업의 통합적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구 성**
- 본회의 위원장은 각 시장 순번제, 위원은 지자체장, 선도산업지원단, 광역경제위원회 등 광역기구 단체장, 중소기업청, 지경부 등 중앙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20인이내로 구성
 - 회의는 정례회는 반기 1회, 임시회 필요시 개최

〈그림 4〉 대전-세종권역 경제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안)

는데, 이 경우 예컨대 대전-세종권역 기업의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애로사항 해결 등 통합기업 지원서비스 제공, 대전-세종권역 산업 발전전략 수립, 국내외 산업기술, 인력교류, 수범사례 연구, 국내외 특허동향, 투자정보 조사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한 대전-세종권 신산업발굴 지원사업 추진

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중이온가속기(회귀동위원소 가속용 중이온가속기)의 기술적,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물리적, 환경적 인접지역인 중부권 지역이 중심이 되어 기능적인 부담을 피하고 국가핵심 성장동력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대전-세종권역을 중심으로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하여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지구 육성 및 기반 구축 사업을 협력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이온 가속기의 권역 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수용기반 확보, 인근 지역 연관 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전문화 거점지구를 설정할 수 있겠다. 예컨대 대덕특구-행복도시 중간지대(원자력 분야 협력 전문화 거점지구), 행복도시-오송생명과학단지 중간지역(바이오 분야 협력 전문화 거점지구), 행복도시-연기·공주 중간지역(의학 분야 협력 전문화 거점지구)로 지정하여 관련 전문분야의 Lab실, 활용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그림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계체계



〈그림 6〉 중이온 가속의 활용분야 및 지역간 역할 분담

V. 통합적 산업유치 지원 및 국제공조체계 구축

1. 공동 기업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

대전-세종권역은 공동 협력사업으로 권역내 산업집적 확대를 위해 통합적으로 마케팅 및 유치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유치홍보를 위해 권역내 협력적 마케팅(place marketing) 추진, 유치기업을 위한 공동의 인적자원 공급 및 교육·훈련(customized training/education)체제 구축 등 두가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겠다. 먼저 기업의 유치홍보를 위한 중부권 지역마케팅(place marketing) 추진과 관련하여 수도권 및 해외기업의 활발한 유치를 위하여 공동의 지역마케팅을 실시하고,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권역내의 공간 통합적으로 '삶의 질' 관련 여러 자원을 홍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치기업을 위한 공동의 인적자원 공급 및 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산학관 협의회 조직, 운영(커리큘럼의 작성, 수요의 파악 등), 수요자 주문형 인적자원 교육과정 지원사업 등을 준비할 수 있다.

2. 국제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대전-세종권역내의 국제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양 도시가 갖는 국가중추기능을 전제로 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경제교류에 있어서도 국제적 표준에 따라 고차적인 기능과 역할이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국제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무역진흥공동기구 및 수출촉진 행정협의회를 협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역진흥공동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수출촉진 및 통상업무의 공조체제 구축, 자치단체 공동출자를 통한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의 상생적 협력차원의 복지·여성정책

2장

이연복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대전·세종의 상생적 협력차원의 복지·여성정책

이 연 복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DAEJEON
SEJONG
FORUM

I. 들어가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의 큰 화두는 “신 사회의 위기” 라는 개념의 인식 및 대응이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각 국가별 “신 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게 분석하고 대응하는냐가 그 국가의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2010년대까지의 정부 주도하의 큰 정책적 흐름은 “저출산과 고령화” 라는 큰 변수에 대응한 결과들을 체험해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 본다면 자본주의의 질서에 맞추어지는 인간 삶의 변화에 있어서 국가, 지역사회, 가족이라는 위기 대처의 최저 단위의 변화로 겪게 되는 혼란과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인식구조의 변화 및 사회체제의 재구성 전략이 현재 및 미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대처 최저단위는 무엇이라고 규정 할 수 있는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가족을 중심으로한 세제, 법제, 복지시스템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초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지방자치 시대의 의 지역사회는 국가발전의 큰 방향하에서 그 간극을 채워나가는 지역사회를 구성해 왔다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복지의 최저 단위이면서 최후 방어선으로 인지되고 있고 사회사회의 발전 단위의 개념도 “가족” 이라는 것에는 의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이 최근 다양함을 넘어서 개별화되고 제도권에서 이탈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짐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사회발전 및 방향구성에 전제되어야 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의 인구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그 중요변화인 가족의 흐름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지역발전 특히 인구순수유출입의 관계가 긴밀한 대전, 세종의 사회복지, 여성의 상생하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지역발전과 복지의 단위인 가족의 변화

최근 여러 언론 및 보고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가족의 개념 변화에 이은 사회 특히 경제 전반 및 교육구조의 변화 및 지역자치의 생존을 가능하는 척도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의 형성 및 유지가 지역사회의 생존이며 삶의 규모 및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사회복지의 경우 국가가 사회복지의 책임을 어떤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가의 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 및 제반 정책 방향에 큰 변수이다. 그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두고 있다고 인식되는 북유럽의 경우와 가족 및 국가의 이원 책임의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에서의 저 출산의 세계적 흐름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저출산 및 여러 가족 정책의 내용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구분은 국가의 완전한 책임을 강조하는 북유럽과 달리 가족과 시장이 견고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일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는 잔여적 개념의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미국등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은 일찍이 가족 단위의 책임을 국가 수준의 책임으로 전환하면서 여성, 모성, 가족등의 탈상품화 탈가족화등을 추진하면서 결국 지향점은 국가의 한 개인이 독립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는 동안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견고히 움직였으며 그 방향을 한국은 지향하고 싶어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신 사회의 위기를 개인의 탈가족화되고 개인화 된다고 가정되는 삶 속에서의 관계망을 상정하고 있었고 그것을 조화롭게 성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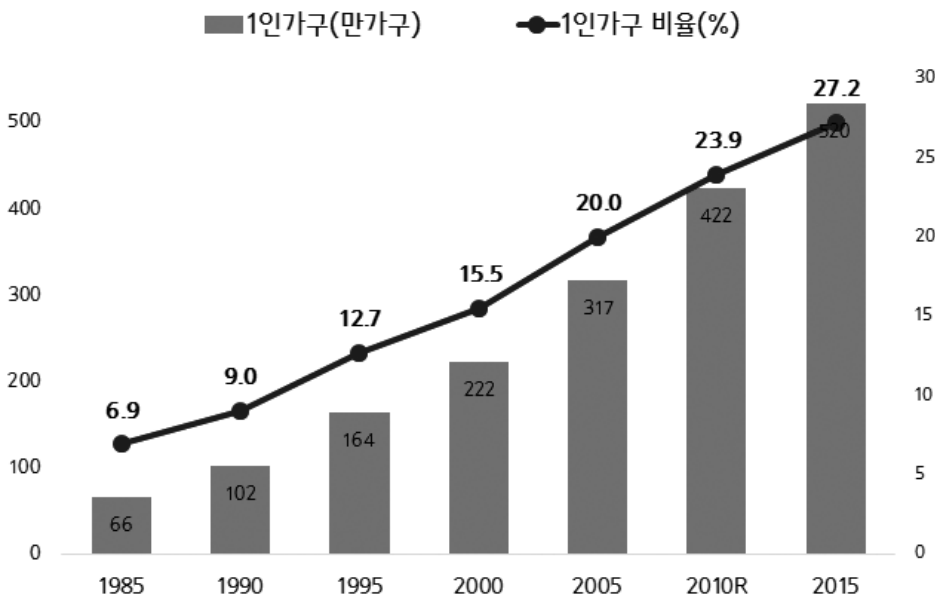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은 신 사회의 위기에서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초고령화된 사회의 최저 출산율이라는 당면과제의 극복에 있어서 그 방향성은 가족의 구성과 가족이 삶의 위기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관념이 깊게 깔려 있는 듯하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효과적이지 않고 현 상황은 더 더욱 빠르게 혼인외의 다양한 파트너 쉽의 경험들을 하고 있으며, 상징적으로 나타내지는 현상이 1인 가구의 급속한 성장이라고 할 것이다. 급속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기의 방어선이며 단위로써 신사회를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가족 및 인구구조의 현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혹은 정책적 수준에서도 위기 방어 수준을 한 개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단위의 복지 수준 및 가족유지를 위한 가족 정책의 서비스는 이미 개별화 개인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의 방향과 상당히 의미 및 효과가 감소하는 듯하다. 즉 정책

방향이 지원하지 못 한다하더라도 제도화되지 못하더라도 탈 가족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이미 가장 많은 범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책적 수준의 제도적 수준의 유인 없이 진행된 개별화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유대감을 지니고 관계성을 지속하느냐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을 이루는 개인에게의 강요적 시선과 압박, 가족관계에 대한 친밀성의 하락 및 관계 설정의 어려움까지 표현하는 1인가구의 모습에서, 그들이 주장하거나 맺고 싶은 관계에의 결속을 원하는 경향은 다른 대안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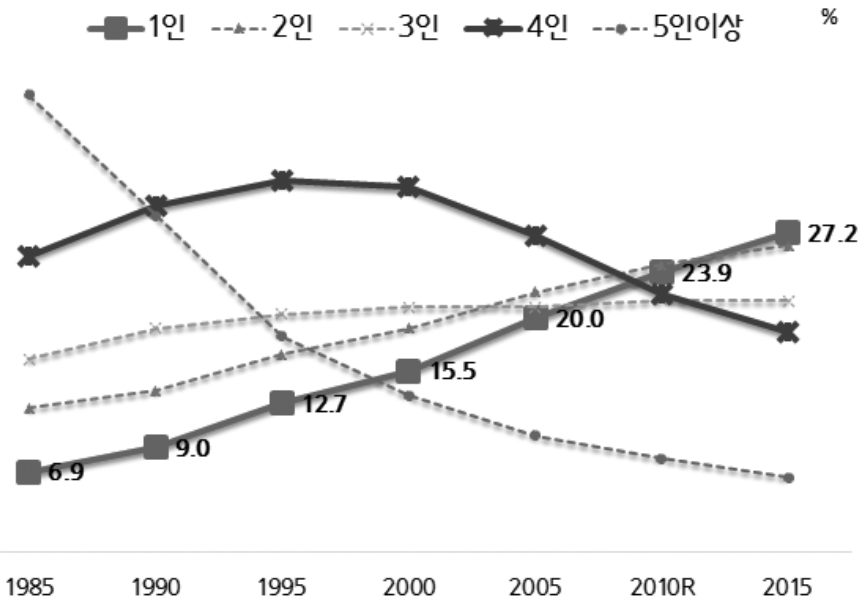
우리사회 가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한국사회가 경험한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등의 압축적인 변동 못지 않게 진행되었던 것이 가족의 변화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 2015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2.53명이다. 이는 주요국가 미국 2.54명, 일본 2.42명등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27.2%로 가장 큰 비중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2인가구 (26.1%)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주된 가구 유형은 4인가구였으며 2010년은 2인가구(24.6%)가 2015년에는 1인 가구(27.2%)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얼마 안지나 부부가 두자녀를 키우는 핵가족의 모습은 또 하나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남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림 1〉 연도별 1인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 2015 연도별 인구 주택 총 조사결과 보도자료)

〈그림 2〉 연도별 가구원 수 규모



자료: 통계청: 2015 연도별 인구 주택 총 조사결과 보도자료)

지금 대두되고있는 1인가구는 그 구성비율로 보면 30대가 18.3%, 70세 이상이 17.5%, 20대가 17.0%로 20대와 30대가 1/3이상을 구성한다(통계청, 2016) 특히 노인층의 1인 가구 증가와 달리 젊은 세대의 1인가구 증가현상은 기존 프레임의 복지 대상자인 노인 인구층이 아닌 점과 그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세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아닌 부분이어서 가족 부양의 원칙이 있는 복지 패러다임과 상충하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해야만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은 가족의 개인화와 탈제도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데, 개인화란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서 벗어나 가족 형성 및 해체 방법, 시기, 친밀한 대상의 선택과 그 내용의 결정등을 가족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이 선택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제도로서의 가족이 주는 의무와 책임, 부담보다는 자유로운 개인적 생활을 지향한다. 이들이 원하는 관계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주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친밀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의 형성을 지향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족 가치와 가족 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 형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이른 바 “표준화된 생애주기” 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 가족의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현재 진행형” 으로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미 만혼과 만산, 결혼율과 출산율의 감소, 무자녀가족의 증가, 한 부모가족과 재혼가족의 증가, 비전통적인 파트너십(동거등)의 증가, 비혼출산의 증가등이 진행되고 있다. 가족 구성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중요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결혼을 통한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 형성시기의 지연과 결혼이나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청년세대에 있어서 결혼으로의 진입, 가족의 구성이 가족부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혼과 가족 구성의 방식, 다양한 삶의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찾는 것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한다고 할 것이다. 향후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변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강화가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제나 법제도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위기의 지지선을 아직도 한국은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법체계와 사회서비스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특히 복지혜택에 있어서는 소득의 산출조차 가족구성을 전제로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개별적 독립을 추구하는 1인 가구에 있어서 주거는 중요 요소인데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1명당 5점씩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이 있어서 1인 가구에 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 모델에 근거하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는 전물량 방식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우선 산정한 뒤 기타 가구유형에 대하여 기계적 산정하는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은 중소도시 거주 젊고 건강한 가구를 표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듯하다. 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 서비스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인 가구들의 특징은 지금 현재 자산 규모면이나 노후 대책면에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특히 청년층의 1인 가구들에게는 소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지닌 개인의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성원 수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삶의 방식의 교환을 연대의식에 기초해서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 했을 경우 어떠한

정책적 고려를 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의 흐름은 문제 발생후 문제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었다면 그리고 그 대책이 주로 책임을 공유할 가족이 있느냐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가족의 형태가 아닌 가구의 형태로 존재하는 탈가족화하는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적 성격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기초로 한 정책을 필요로 하고 먼저 시작하는 지역사회가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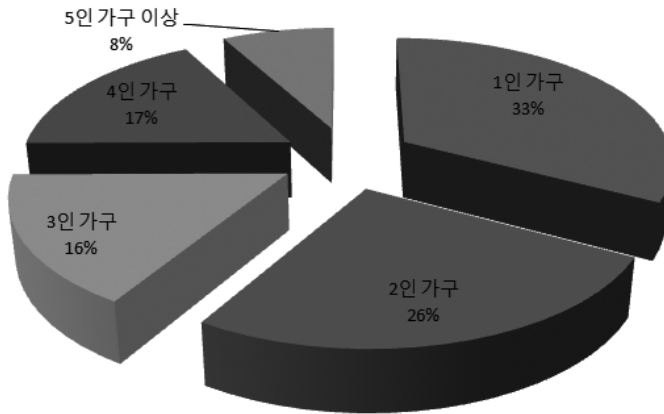
Ⅲ. 대전.세종시의 인구변화와 지역적 공동체의 의미

인구 감소시기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자연적 사회적 성장을 유지, 유도하여 인구 규모의 적 절선을 유지하여 지방자치에 순응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여기에 자생적 변수가 아닌 신도시 개발이라는 사회적 변수가 발생한다면 지역사회로서는 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자발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유인요인을 강화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대전시는 가장 최근에 이런 사회적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한바 있는데¹⁾ 대전시 사회적 요인으로서 전출입 규모를 보자면 2014년 기준으로 -8,838명으로 집계되며 그 유출지역으로는 세종시, 서울시, 제주도등으로 인구 유출이 진행되었다. 대전시와 전국 수도권 서울시간 전출.전입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가족, 주택등의 비중이 많은데 특히 세종시로의 전출은 직업에 의한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자치시의 개발과 함께 대전시가 선택한 전략은 크게 도시 경쟁력과 매력도 증진이라는 두 과제에 집중하기로 하는데 그 하부 과제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영유아 생활환경 개선정책으로 요약된다. 인구유입의 전환적 국면으로 직종 창출을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가족 단위정책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식 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전략적으로 발생한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구성되어가고 있는데 가구원수별 가구는 1인 가구가 32.8%로 가장 많고, 2인 가구(25.8%), 4인 가구(17.2%) 순이다. 2010년 대비 1인 가구가 47.5% 증가되었는데, 특히 조차원읍은 49.6%나 증가되었다. 이는 세종시가 아직도 건설중이며 건설시기의 도시에 직종을 기반으로한 일시적 1인 가구의 증가로도 볼 수 있으나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그 추이를 관찰해야만 한다고 보여진다. 2013년 세종시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보면, 40대 인구가 17,523명(15.2%)으로 가장 많고, 30대 인구(16,931명, 14.7%), 20대 인구(16,211명,

1) 임병호외 (2015). 대전광역시 인구변화와 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

14.0%) 순으로 세종시 자체로서는 상당히 젊은 인구군을 유입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대비 전연령 층에서 인구가 증가했으나 특히, 30~50대와 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10대 이하에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가족단위의 유입인구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포진한 것으로 보여진다.²⁾

〈그림 3〉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출처: 2013년 세종시 특별센서스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가족 및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한 시기의 대전, 세종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하여 어떠한 고민을 하여야만 하는가가 이시점에서의 논의할 내용으로 인식된다. 요약하자면 전체 인구구조상 다양한 가족을 넘어서 비 가족의 형태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지방자치 시대에 인구 유입 및 유출을 가족 단위의정책으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의 맥과 같이 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강점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정책으로서 가족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정책과 현 상황에 적합한 1인 가구 위주의 인구 구조에 적합한 정책을 같이 병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가 선진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가 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가장 빨리 집약적인 삶의 구조가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의 가족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황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전시가 방향설정된 대전시 양성 평등정책에서 그 방향점을 알아볼 수 있으며 또 이미 연구된

2) 2013년 세종시 특별센서스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4)

대전지역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지원 방향에서 보여지는 쟁점들을 알아 봄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 여성 정책의 방향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분석에서 제기되는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목표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정책 과제	대과제[7개]		중과제[12개]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2. 일·가정 양립 확산		· 일, 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돌봄의 다양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3. 고용 격차 해소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4.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 폭력근절과 인권 보호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실내화 · 안전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6. 건강과 복지 증진		양성 평등한 건강권 보장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7.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연계 강화	

출처: 주혜진, 류우선 (2016),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효과 분석, 대전 발전 연구원 p4

지방자치의 시대에 보다 집중된 자원과 인구의 집중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나름의 정책을 구현하기는 무척 어려워 보이나 이미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족 구조는 중심적인 내용이 개인화 탈 가족화하고 있다면 가족 정책으로 일, 가정 양립속에 편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성평등 문화확산 속에 그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호하다. 물론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큰 구조적 과제 아래에 복지와 여성정책 속에 가족정책으로 구성하기도 여성정책 으로부터 구성하기도 어려운 1인 가구의 특징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세종시는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하는 원지역 주민과 세종시로 편입된 이주 편입된 가족 중심의 거주권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를 위한 통합적인 시각의 지역사회복지 혹은 여성 가족 정책의 방향을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먼저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사회가 가지는 상징성 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당면한 문제로 이 두 지역사회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전은 전국 규모의 3%의 인구군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정책에서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일, 가정양립확산, 고용 격차 해소,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건강과 복지 증진,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목표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세종, 대전의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산정하거나 형성하고자 하는 과제는 주제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종시를 위해서는 유인된 인구와 기존 인구군간의 지역의 통합적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정책의 한 과제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비해 대전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현황 파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선진적으로 대응하자면 1인 가구를 위한 지역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양성의 개인 또는 가족이 삶의 질을 영위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성장이 각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IV. 가족 변화에 따른 지역복지,여성정책 제안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가족내, 가족간 구성과 변화가 빠른 속도와 규모로 진행 중인 시점에 와 있고 노동시장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의 변화에도 영향을 가할 것이다. 보다 안정적인 가족의 삶이 보장되고 개인의 삶이 보장되는 지역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공동체의 형성 및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대변화에 따른 가족 변화를 수용하고 가족 구성의 형태와 방식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며 다양한 가족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가족정책의 범주의 확장 즉 자녀양육지원, 일 가정양립지원등과 함께 가족의 구성, 형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생활 및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이들의 주거 불안정 및 주거 환경의 악화는 지역의 사회문제화 될 수 있으며 이를 선제적으로 제안 할 수 있는 비혼인 1인가구의 공동 가구의 주거 실험등은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고독과 단절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아니면 더 작은 거주 단위 내에서의 공동체적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는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관계의 형성이 개인의 삶과 배치가 되지 않으며 자녀양육이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려면 가족 정책 및 개인의 삶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선택, 가족의 삶에 대한 인식 개선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자녀를 잘 양육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³⁾

결국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인식개선과 개인의 다양한 삶의 선택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지금 변화하는 가족 및 인구구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법체계의 변화를 기다리기에는, 실재하는 상황이다 보니 보다 작은 단위인 지역단위에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6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있다. 『서울 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에서는 새로운 가족 형태로서의 “사회적 가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혼인이나 혈연, 입양에 의하지 않은 사회적 결합관계를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여 1인 가구도 공동주택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가족을 형성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지방자치 수준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식형성 및 인식개선정책이 일, 가정 양립정책과 더불어 실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진다.

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중 포용적 가족관 관련내용 : 포용적 가족관 형성 - 가족형태 다양성 수용을 위한 논의기구 우녕 및 새로운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및 정책개발,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추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부처 협의기구 마련하여 인식개선, 차별사례발굴, 시정등을 논의한다.(관계부처 합동(2015) 92)

참고문헌

- 통계청 (2015) 인구 동향 조사
 - 통계청 (2015) 전국 인구 주택 총조사
 - 김영철, 김연수, 김인경 (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임병호외 (2015). 대전광역시 인구변화와 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주혜진, 류우선, 박민정 (2015) 대전 지역 여성 1인 가구 안전 지원 방안, 대전 발전 연구원
 - 주혜진, 류우선(2016) 대전시 여성평등정책 현황 및 효과분석, 대전발전 연구원
 - 김영정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여성노인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 장진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청년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6), 제102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저출산 해결의 새로운 전략 - 포용적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대전시와 세종시의 3장 상생협력 문화적 가치 공유

이 춘 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협력 문화적 가치 공유

이 춘 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DAEJEON
SEJONG
FORUM

I. 생활문화 교류협력

1. 대전-세종문화원 교류협력

대전시 5개구 문화원, 세종시 세종문화원은 지역문화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협력하여 향토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 5개구 문화원과 세종시 문화원이 향토문화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교류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음.

1) 지리적 인접 생활문화권

대전 시민들이 주거지를 세종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직업공간은 여전히 대전에 두고 있음. 그런가 하면 세종시에 직업공간을 두고 있지만 주거지를 대전시에 두고 있기도 함.

주거지와 직업공간의 혼용과 혼재는 문화적 상생협력을 가능케하는 부분임. 세종시민으로 대전시민으로 지역적 일체감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생활문화권역을 동시에 또는 혼용하게 되는데 이 점은 문화정책에서 고려해 보아야할 중요한 지점임.

예컨대, 경기도 일산, 분당지역 개발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주거지로 일산이나 분당을 택함으로써 일산, 분당은 여가, 휴식, 교육 등이 발전되어갔던 점을 고려함.

지역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구유입으로 지역의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문화개발 사업 필요함.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활동자 양성

대전시도 그동안 외부 인구 유입이 끊임없이 이어져오면서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평생학습관 등의 공공문화시설에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학습모임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적응해왔음.

대전시 5개 문화원 및 세종문화원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이미 각종 문화동아리 활동이 활발함. 최근 이들 문화동아리활동을 넘어서서 지역민들은 좀더 전문적인 문화봉사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추세임. 즉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민들의 욕구에 맞추는 것과 문화원들이 추구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봉사자들이 요구됨. 즉 소속 생활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활기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한정된 소수 직원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소속 시설의 보조인력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문화인력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의지가 필요함. 생활문화예술활동이 이제까지는 문화강좌(문화학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문화강좌 수료생들의 심화단계로서 문화동호회 형태로 전문화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문화소외층, 취약계층들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도록 함

문화봉사자들의 활동을 동아리 또는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독립된 활동 영역을 만들어 가도록 함. 예컨대 문화원 및 지역소식 뉴스레터 제작의 경우, 리포터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리포터들의 경우는 동아리형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또한 기관 프로그램 모니터링 담당봉사자들도 동아리형태로 운영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함.

이들 봉사자들을 특화된 프로그램 활동가로 훈련하여 전문화하도록 함. 지역문화봉사자로 오래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스스로 전문활동가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때 지속가능함.

이때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력은 개인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아리(동호회) 형태의 스터디모임을 갖도록 유도함. 문화학교 강좌 참여자들이 예술장르중심 활동가와 주부봉사자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전문직 은퇴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은퇴자의 경력(언론, 교직, 군인, 공무원 등)을 감안하여 생활문화 관련 영역의 문화봉사단을 넓혀나가도록 해야할 것임.

2. 대전-세종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교류협력

생활문화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는 동단위의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생활문화권을 풍요롭게 함. 대전 세종의 각종도서관 교류 뿐 아니라 <희망의책대전본부>를 주축으로 대전세종간 책읽기 프로그램 연계 사업으로 생활속 독서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함.

1) 세종시 도서관 자원

세종시에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으로는 도담동도서관, 한솔동도서관, 종촌동도서관, 아름동도서관 등과 작은도서관 24개가 운영되고 있음.

2) 대전시 도서관 자원

한밭도서관을 비롯 5개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활동이 활발하며 특히 마을어린이도서관 활동이 전국적으로 자랑할만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음.

희망의책대전본부는 2006년 발족되어 지역문화원, 도서관, 시민단체가 협력을 통해 책 읽는 운동을 지역문화운동으로 발전을 시킴. 한국문화원연합회대전지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문인협회대전지회,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YMCA 6개 대전시민사회 단체가 창립준비모임을 구성하고 책임은 대전운동 명칭공모를 통해 '희망의 책 대전본부'로 하고 슬로건은 "책으로 행복한 대전"으로 선포함. 2008년부터 매년 '우리대전같은책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지역 책읽기모임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II. 과학문화도시 협력 방안

대전문화재단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예술과학 융합축제인 '아티언스 대전'을 대전시립미술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과 연계하고 세종문화재단이 참여해 충청권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대전과 세종을 과학관광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임.

대전시는 오랫동안 과학도시를 표방해왔고, 최근 과학문화도시로 브랜드를 재설정하고 있음. 세종시 역시 과학기술과 관광이 결합된 융합관광의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티언스 프로젝트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과정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예술의 다양한 장르간 융복합, 예술공간과 과학공간 등 이질적 공간들 간의 융복합을 포함함. 아티언스 프로젝트는 국제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된 대전의 지역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콘텐츠로 이러한 콘텐츠는 세계과학도시연합 의장 도시로서의 대전시 전략이기도 하며, 과학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문화교류 거점도시로서 대전의 역할 모색의 일환이기도 함.

대전의 아티언스 관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¹⁾

1. 대전시립미술관, 프로젝트 대전 / 2005년 ~ 현재

존 대전FAST에서 '프로젝트 대전'으로 이름 바꿔 2년 단위 진행하고 있음. 2005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대전FAST2005: 과학과 예술이 여는 미래'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진행되었음. 대전세계박람회(대전엑스포)로부터 국립중앙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덕연구단지, KAIST와 같은 상징적인 과학 관련 기관 및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개최된 미술관에서 행사인 만큼, 자연스럽게 과학과 예술의 상관성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표출된 행사라고 볼 수 있음. 이 행사는 'Digital Paradise'라는 부제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국내에는 생소했던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와 특별전 및 국제학술심포지엄으로 구성됨. 2007년 진행된 '모자이크 시티'는 국내의 과학예술 혹은 미디어아트 분야 국내외 1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2012년 '프로젝트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진행됨. 2012년 '에너지(Energy)', 2014년 '브레인(Brain)', 2016년 '코스모스(Cosmos)'로 진행되고 있음.

2. 과학예술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 2006 ~ 2012

2005년부터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진행해 옴. 2006에는 제1회 '과학예술특별전-과학기술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인체과학, 컴퓨터과학 광학 나노과학 자기과학 등과 예술을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함. 2011년 과학예술특별전 '화학 어둠 속에서 꽃을 피우다'까지 진행되다가, 과학예술특별전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2013년 '과학과 예술의 만남, 오토메나 & Fanny Art' 특별전을 개최함.

3. 아티언스(Artience) 프로젝트, 대전문화재단/ 2011년 ~ 현재

아티언스 프로젝트는 대전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학-예술융합 프로젝트임. 작가들의 과학적 상상을 공모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과학자들과 연계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구조로 진행됨. 작가공모를 통해 과학자들과 매치 업으로 진행한 이후 아티언스 페스티벌-오픈 랩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선보임. 아티스트와 과학자의 1:1 매치업 프로그램으로 작가들에게 과학연구 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형식적 차원에 그치지 쉬운 과학자들과 매칭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함. 국내의 시도 중 가장 실험적인 프로그램으로 '2016년 아티언스 대전'은 대전원도심 갤러리와 연계하여 5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외에, 일본의 로봇연극 초청공연, 과학관련 영화 상영, 학생참여 작업인 '아티언스 캠프'결과물 전시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1) ALICEONNET, CoverStory_TAG12, 예술과 과학의 융합: 2016년 한국 예술과 과학은 융합하고 있는가?(글 유원준)에서 발췌.

4. 아티언스(Artience) 프로젝트, 대전문화재단/ 2011년 ~ 현재

아티언스 프로젝트는 대전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학-예술융합 프로젝트임. 작가들의 과학적 상상을 공모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과학자들과 연계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구조로 진행됨. 작가공모를 통해 과학자들과 매치업으로 진행한 이후 아티언스 페스티벌-오픈 랩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선보임. 아티스트와 과학자의 1:1 매치업 프로그램으로 작가들에게 과학연구 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형식적 차원에 그치지 쉬운 과학자들과 매칭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함. 국내의 시도 중 가장 실험적인 프로그램으로 '2016년 아티언스 대전'은 대전원도심 갤러리와 연계하여 5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외에, 일본의 로봇연극 초청공연, 과학관련 영화 상영, 학생참여 작업인 '아티언스 캠프'결과물 전시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5. KAIST SHuM 프로젝트, KAIST/ 2012년 ~ 현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은 2012년 KAIST Humanity Muses Project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전시는 고학과 인문학, 예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2 KAIST SHuM 프로젝트-하늘을 보다' '생명은 아름답다(2013)', '인공의 뇌, 로봇은 진화한다(2014)', '사물의 이치를 배우다(2015)' '적정예술은 즐겁다(2016)' 등의 제목으로 매년 전시해오고 있음.

Ⅲ. 축제 교류협력

독자적인 지역문화 콘텐츠를 축제화하고 이를 교류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대전의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아티언스 대전의 일부 프로그램을 세종에서 열고, 세종의 축제인 세종축제 일부를 대전에서 개최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의 공동자원인 금강을 활용해 축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1. 세종시 축제²⁾

세종시는 개성있는 지역문화권 형성과 특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백제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권 형성기반을 조성하고 해안 내륙의 자연 역사문화 산업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하며 역사문화 자원들을 활용하여 테마관광자원을 정비 복원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한 거점 관광

2) 세종시, 충청문화관광산업연구소(2013), 제1회 세종축제 콘텐츠 개발연구

지와 관광벨트 육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세종시 축제: 북송아축제(조치원 일원, 매년8월초), 세종축제(호수공원 일원, 매년10월), 세종 뷰티페스티벌(세종시 일원, 매년4월), 영평사구절초축제(장군면 영평사, 매년10월)

세종시 관광자원: 금강자연휴양림, 베어트리파크, 금강대도, 충남산림박물관, 운주산성, 교과서박물관, 뒤웅박고을, 고북저수지, 감성리백로서식지 등이 있고, 최근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 도서관, 세종시립민속박물관 등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정받고 있음.

2. 대전시 축제³⁾

대전시 대표 축제는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효문화뿌리축제, 대전국제와인페어, 유성온천문화축제, 금강로하스축제, 디쿠편스티벌, 계족산맨발축제, 견우직녀축제가 있음.

3.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학생과 가족단위 관람객이 “익사이팅한 사이언스 대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여행” 주제를 선정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융합형 과학체험축제 연중

4. 효문화뿌리축제

성씨 뿌리를 통해 조상의 얼과 지혜 및 전통문화 효 확산
전국 단위 각 문종을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충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제 병행
국내 유일의 뿌리공원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국가 대표 축제화

5. 대전국제와인페어

대전국제와인페어는 '와인'을 테마로 하는 아시아대표 와인 종합 박람회로서 와인 전문가와 애호가
가는 물론 와인에 관심있는 분야면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 형 축제로 과학 문화도
시 대전에서 와인색으로 물든 가을 단풍의 추억을 담아가는 것을 컨셉으로 함.

6. 유성온천문화축제

1989년 유성온천과 과학도시 유성의 소중함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계승시킨 축제로 지난 1989
년 처음 개최돼 올해(2016년)로 23회째를 맞고 있음. 유성 온천의 유래와 효능을 바탕으로 '온천'을
주제로 한 축제가 시작되었으며, 과학의 도시 유성을 알릴 수 있도록 과학과 온천을 접목시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7. 금강로하스축제

금강로하스축제는 로하스금강프로젝트에 의해 완성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산호빛공원, 에코공원 그리고 전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로하스 해피로드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학습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해 「가족, 건강, 행복, 나눔, 환경, 학습」을 컨셉으로 매년 새롭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음.

8. 다쿠페스티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종합만화축제임.

9. 계족산맨발축제

맨발축제는 숲속 황톳길을 맨발로 걷거나 달리면서 숲속에서 감상하는 문화예술작품과 다양한 체험이벤트, 음악회 등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감동을 함께 느낌으로써 에코힐링의 진수를 체험 하는 세계 유일의 친환경 맨발축제임.

10. 견우직녀축제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견우직녀축제는 견우와 직녀처럼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꿈, 기다림, 건강, 감사, 용서, 배려, 나눔, 용기, 행복, 그리움, 만남을 컨셉으로 함

IV. 지역문화정책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최근 제정된 문화기본법(2014), 지역문화진흥법(2014) 등에 기초한 지역문화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대전문화재단, 세종문화재단이 협력하여 대전세종지역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파트너로서 문화적 상생의 자치시가 되도록 함.

문화관련 법은 다음과 같음⁴⁾

1. [문화기본법](본회의('13.12.10) 의결)

(제정 이유)

- 현행 문화 관련 법률이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국민 개개인의 문화권에 대한 제도적 토대 미비
- 국민의 문화권은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유엔 세계 인권선언'(194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2001) 등을 통해 천명되어 왔음
- 이에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3.12.10.)

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 제정 필요

(주요 내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 문화, 문화 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 명시
- 문화예술, 생활양식, 가치 체계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문화의 개념을 규정
-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서 문화권에 대한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근거 마련
- 문화유산, 국어,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복지, 여가문화 등 문화정책 추진 영역에 대한 근거 마련
- 문화인력 양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문화의 달, 재정 지원 등 문화 진흥 시책의 근거 마련
- 문화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본회의('13.12.10) 의결)

(개정 이유)

- 열악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범죄와 무질서법”, “형사사법과 법원 서비스법”은 지역별로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기관협력시스템을 형성한다. 지역경찰은 범죄예방과 연계된 자치단체, 소방, 교정국, 보호감찰국, 보건국, 주택국 등 산하지방조직들과 강력범, 폭력범의 전과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제도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기를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의 위험한 강력범죄는 경찰조직의 한 기관에 의한 예방과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경찰에 의해 체포와 형사사법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범죄가 통제를 벗어나 재범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경찰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경고하고 있다(김상균, 2012).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07.29. 법률제12354호, 2014.01.29.제정) (제정이유)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하여야 함(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7조 및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대학, 문화예술관련 기관 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문화도시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제15조)

-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음(제19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제22조)
-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V. 금강 유역권 누정문화 공동 연구

장수 뚝봉샘에서 발원된 금강의 원류는 대전천을 거쳐 대전천, 유등천, 갑천, 대청호와 합류하여 금강으로 흐름. 금강 유역을 따라 형성된 누정문화 연구를 통해 문학과 지리적 환경 공통점을 찾아가도록 함.

1. 세종시 경우

1) 독락정: 임난수의 임난수의 둘째 아들인 임목(1371~1448)이 낙향하여 건립함. 임목이 정자의 이름을 독락이라 한 것은 송의 사마광(1019~1086)이 은퇴하여 만든 정원의 이름에서 유래, 18세기경 후손 덕량이 종인들과 더불어 중수함. 부강면 연기면 금남면 일원(세종시 기념물 제8호)

2) 보만정: 현종 10년(1669) 9월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이 학문을 연구하며 여생을 마치기에 좋은 곳이라 하여 검담에 건립. 정자의 명칭인 모만은 늪어가면서도 자기의 행실을 깨닫기 위하여 지켜나가고 옳은 길로 나가야한다는 뜻. 동춘당이 67세의 나이로 별세하자 후손과 유림이 함께 보만정을 수호함. 보만정은 검담서원의 부속건물로서 학문을 강론하는 공간으로 사용됨 (세종시 문화재자료 제10호)

3) 검담서원: 숙종20년(1694) 문의, 청주, 연기, 회덕, 공주 5고을의 유생들이 검담서원을 세워 송준길을 제향하고 이듬해에 사액을 받음. 고종8년(187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어 검담서원 묘정비만 남아있게 됨.

4) 합강정: 금강과 미혼천이 만나는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 인근 창건 추정. 건립과 중수 등의 사적은 없으나 19세기 초반경 훼손로 추정. 조지겸, 남용익, 윤순 등이 합강정을 연기의 명승으

로 언급, 시문이 많이 남아 있음.

5) 제산정: 제산 임영휴(1866~1917)가 생전에 지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아들 임헌두(1896~1940)가 부친의 뜻을 이어 1919년 건립.

6) 한림정: 조선초기에 건립되었던 정자로, 한림학사 신준미가 터를 닦다가 중지하고 그 자리에 후손들이 지은 것으로 알려짐. 민제인(1493~1549)의 문집 [입암집]에 민제인이 한림정을 방문하고 지은 시 수록, 오봉 이호민(1553~1634)이 1611년 회덕의 송남수(1537~1626)가 보낸 오언고시 10수 중 7수에서 한림정에 대한 내용 있음. 1923년 증보간행된 [공산지]에 한림정 관련 일화가 소개. 평산신씨 한양공파종친회에서 발의하여 1964년 창건

7) 금강 문화(누정문화, 나루터): 독락정(), 한림정(터), 누정지(금강권과 연계, 가장 상류에 위치한 보만정 있음), 함호서원(고려말 성리학의 선구자 문성공 안향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1843년 명칭을 함호서원으로 함.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고 1949년 전국 218향교의 동의를 얻은 후 서원을 복설

2. 대전시 경우⁵⁾

1) 취백정: 북면 미호리에 있는데, 옥오재 송상기가 세웠음. 취백정은 제월당 송규렴이 금강 연안의 미호에다 1701년에 세웠던 강학처임. 그는 대사성 대사간 총청감사를 역임했는데 1689년 송시열이 유배갔다가 사약을 받고 죽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 회덕으로 돌아와 학문에 힘씀. 취백정은 그가 말년에 또다른 강학처로 세웠던 건물임 정조가 친필로 '사호각'이라고 현판을 써서 내렸는데, 광복 후 도난당함. 송규렴이 죽은 뒤 171년 취백정 건너편에 그를 모신 미호서원이 세워지고 1721년 사액되었다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때에 헐리고, 지금은 1983년에 세운 유허비만 남아 있음. 취백정은 신탄진에서 대청댐으로 가는 길 오른 쪽 언덕에 남향으로 서 있으며 주소는 대덕구 미호동 188.

2) 능허정: 현 북쪽15리에 있었는데 옛터만 남아 있음. 능허정은 누가 언제 세웠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음. 민제인, 송몽인, 송남수가 제영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민제인(1493~1549)의 생존시기를 기준으로 늦어도 16세기 전반기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민제인의 시에서 “강물이 백마가 흥망한 곳으로 통한다”는 구절로 보아, 현재 대청호의 수로가 된 금강 연안에 세워진 듯하고, 송몽인의 시에서 “강물이 북에서 합쳐 두 이무기가 다투네”라는 구절을 보아 갑천이 흘러들어와 합류하는 지점인 듯하다. 이곳은 대덕구 문평동으로 문평동 금강가에 세워졌던 듯함.⁶⁾

3) 창구당: 창구당 김성발(1569~1642)이 금강 상류 초호변의 창구에 세웠던 정자인데, 언제인가 허물어졌다. 창구는 기묘명헌 총암 김정(1486~1521)이 1519년에 은거하던 언덕인데,

5) 허경진(1998), 대전지역 누정문화 연구, 태학사. 참조

6) 대전시사편찬위원회, <대전시사>제4권, 1992.189~190면

100뒤에 증손자 김성발이 정자를 지어 <제창구>라는 시에 창구 옆에 집을 지은지 벌써 29년이나 되었네, 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13년 이전에 창구당을 지은 듯 함. 형태는 초정. 창구당이 서 있었던 동구 내탑동 158은 대청담에 물이 차면서 수몰되었고, 이곳에 있는 김정익 묘와 신도비, 그의 부인 송씨의 정려각 등은 동구 신하동 268-5로 옮겨져 문화재자료 제25호로 지정됨.

Ⅵ. 충청유교문화권 공동 연구

대전 세종을 포함한 4개 광역시도를 아우르는 유교문화자원의 연계활용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문화자원 확대효과를 극대화함.

예학의 중심지로서 충청문화의 거점화의 일환으로 세종시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대전세종시를 비롯한 충청지역은 선비정신의 본산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충청권 지역민의 자부심 고취시켜줄 것임.

1. 여성문학유산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17~18세기 충청권 여성문학을 가늠할 수 있는 책자를 세종시와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문학유산을 공동 연구하고, 여성문학유산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으며 함. 세종시에는 남평조씨의 [병자일기], 대전시에는 김호연재의 [호연재유고], [증조고시고] 등이 있음.

김호연재의 문집과 남평 조씨의 [병자일기]에 대한 다양한 여성문학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이들 문학의 기본으로 한 연극 또는 마당극 제작 및 시연, 답사 프로그램 등으로 여성문화콘텐츠 발굴을 확산시켜나가기도록 함. 이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가기도록 할 것임.

대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양성평등지역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충청의 여성문학유산 관련 책자와 답사를 진행한 바 있음. 2007년을 시작으로 김호연재를 주제로한 책자발간(문희순, [조선 후기 여성사의 선구적 지성, 김호연재], 2007), 마당극 제작 및 시연(김인경 극본, [봉수엄마, 호연재를 만나다], 2007년 초연), 김호연재 지역답사(고택, 묘소, 흥성옛집),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대덕문화원 주관), 김호연재 1인극(2015년 초연) 김호연재 무용극(2015년 초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

대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양성평등지역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충청의 여성문학유산 관련 책자와 답사를 진행한 바 있음. 2007년을 시작으로 김호연재를 주제로한 책자발간(문희순, [조선후기 여성사의 선구적 지성, 김호연재], 2007), 마당극 제작 및 시연(김인경 극본, [봉수엄마, 호연재를 만나다], 2007년 초연), 김호연재 지역답사(고택, 묘소, 흥성옛집),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대덕문화원 주관), 김호연재 1인극(2015년 초연) 김호연재 무용극(2015년 초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

1) 세종시의 경우⁷⁾

남평 조씨(1574~1645)의 병자일기: 조선 중기의 문신 남이웅 부인인 남평 조씨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쓴 일기로 병자호란 때 피난길에 올라 1636년(인조14) 12월5일~1640년(인조18)8월9일까지 4년여 동안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임(2012년12월31일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4호 재지정됨). 정경부인 남평조씨와 춘성부원군 남이웅 부부의 묘소는 공주 반포 성강리에 있음.

병자일기의 문학적 특징으로 첫째 전쟁으로 인한 피난 여정의 정신적 고통과 남편 자녀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묻어남. 일기 도처에 “정신이 아득고”라는 진술을 많이 하고 있음. 심양에 볼모의 처지로 가 있는 남편 남이웅에 대한 애뜻한 심회를 표현하고 있으며 슬하의 3남1녀를 모두 잃고 자식들의 생일이나 기일 때마다 다례와 제례를 차려주고 죽은 며느리에 대해서도 자식과 똑같이 설행함. 둘째, 수증물품의 목록과 제사 설행으로 보는 17세기 생활사의 보고라 할 수 있음. 셋째, 거주 공간 이동에 따른 호서 지역 지명어의 생생한 반영이 묻어나 있음. 일기에 등장하는 지역은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망라하고 있으며, 친지 또는 노비와 전답 소재 지역을 관계망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특히 호서지역은 일기를 쓰고 있는 작가의 현실적 거주공간이 됨. 넷째, 뛰어난 문학적 감수성의 표현력이 돋보임. 남편이 있는 심양에 갔다온 이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남편의 기별과 편지를 받고 기운이 그만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 가슴 한조각 걸린 것은 언제 풀어질고”라는 표현을 하였고, 일기 도처에서 적절한 인용과 비유를 섞어 상황전달의 묘미를 극대화시키고 있음. 병자일기는 문체상 여성특유의 섬세하고 진솔함, 적절한 비유와 인용이 우리말 정감의 표현과 어우러져 감동을 배가시킴. 이러한 문학적 특징이외에도 노부부의 질병과 건강관리, 세시 궁중의 풍속(납약, 책력) 등 관혼상제, 의식주, 언어현상에 이르기까지 17세기 일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한글기록문화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음.

7) 문희순(2009), 충청의 여성문학유산 답사.

2) 대전시의 경우⁸⁾

김호연재(1681~1722)의 [호연재유고] [자경편] [증조고시고](사후 한글로 번역) 등이 있음. 김호연재는 동춘당 송준길의 증손 소대헌 송요화(1682~1764)의 부인이다. 김성달과 연안이시의 아홉자녀가운데 여덟 번째로 네 자매 가운데 유일하게 문집이 전해지고 있음. 홍성에서 대전 회덕으로 시집으로 살았던 고택이 대덕구 송촌동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묘소도 계족산 아래 고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함. 김호연재가 살았던 고택은 송용역 가옥이라는 문화재 명칭으로 불리다가 최근 소대헌 호연재 고택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

김호연재의 문학은 한문에서 한글로, 다시 한문으로 후손들의 관심 속에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재창조되었음. 호연재의 9세손 송용역이 1995년에 발간한 [호연재유고]는 이러한 시집들을 정리하고 여기에 [자경편], 부록으로 외손 김종최의 <사실기>, 아들 송익흠의 <유사> 등을 실어 발간하여 호연재의 시작품 전모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음.

김호연재는 충절가문의 후손으로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일관된 의연한 삶을 살아가자하였고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토대로 스스로를 경계한 [자경편]6장을 지었고 송씨 집안의 여성과 남성들의 모범적 독서물로 위상을 정립해 왔음. 또한 호연재는 여성교육자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음. 자경편에서 인륜을 밝히고 예의를 잡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능하지 못한다, 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아들 익흠은 물론이고 시댁 조차 송명흠, 문흠 형제들과 직접 경서와 사기를 탐구하여 토론하였고 시구도 일일이 비점을 찍으며 평론해주었다고 함. 호연재는 삶 속에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시아주버니 송요경에게 보낸 편지, 친정 둘째오빠의 아들 곽행에게 보낸 편지 등이 남아있음. [증조고시고]라는 책은 호연재의 증손부 청송 심씨(1747~1814)가 1814년 아들 송규희의 부임지 곽령현에서 필사한 책으로 [호연재유고] 원시를 음사하고 한글로 번역한 형태로 수록된 한시 작품 수는 237수를 수록함. [호연재유고]보다 훨씬 많은 작품수인데 이는 김호연재의 한시가 송씨 가문에서 세대 간에 상당한 관심 속에 향유 유통되었음을 증명하는 예로 주목할 수 있음. 한시가 한글로 음사 번역되어 유통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 일반 사가에서 조상 할머니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하여 후손들에게 읽히게 한 점은 전례를 찾기가 어려움. 우리 문학사에서 시증조 할머니의 한시를 증손자 며느리가 한글로 번역하여 유통시킨 사례는 이 집안이 유일함. 송씨 집안에서 호연재 할머니에 대한 존모와 그의 문학 작품을 느끼고자 한 집안 여성 후손들의 노력을 감지할 수 있으며 많은 후손들이 독자이기도 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함.

8) 위책

2. 박팽년선생 탄신 600주년 공동 기념 사업

2017년은 박팽년선생 탄신 600주년이 되는 해로 세종시와 대전시가 기념사업을 공동협력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추후 다양한 콘텐츠를 공동제작하여 교류협력프로그램이 되도록 함.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에는 박팽년선생과 관련한 '박동마을'과 박팽년선생 할아버지 묘소가 있음.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는 박팽년 선생이 살았던 곳인 장절정 유허비가 있음.

대전시는 박팽년선생 송모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탄신600주년기념 추모제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박팽년 선생 송모사업과 관련하여 대전문화유산협의회는 탄신제, 세미나(학술세미나, 토크 콘서트), 유적답사(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박팽년선생 관련 유적답사), 콘텐츠 제작(박팽년인물 서사극, 1인극, 무용극), 역사인물초상화 그림대회, 박팽년 음악회, 박팽년선생선양회 설립 등을 제안 한바 있음. 또한 2002년 월드컵 기념공연으로 취급한 박팽년 연극공연(김용관 제작)을 한 바 있음.

박팽년 선생 관련 전국의 유적분포는 다음과 같음.

세종 일원/ 전의면 관정리(순천박씨 집성촌), 박안생의 묘(조부)

대전 일원/ 가양동 유허지, 유허비, 창계송절사, 박원상의 묘(증조부)

충주 일원/ 박팽년 사당(신니면) 박팽년 부인 천안전씨의 묘

대구 일원/ 육신사(원본 초상화 보관), 박팽년 후손 집성촌(묘골)

서울 일원/ 사육신 묘(동작구 노량진), 박팽년집터(중구 한국의집앞)

1) 세종시의 경우

박팽년 할아버지 박안생(? ~ 1439)과 그의 처 안동김씨의 묘역(세종시 기념물제10호)이 있고, 아버지와 형제의 묘가 있다고 함. 전의면 관정리 박동은 박팽년 선생의 집안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곳으로 박씨들이 많이 살아 '박동'이라고 불렸음. 박팽년과 그의 형제들이 살았던 터가 전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

2) 대전시의 경우

(1) 장절정⁹⁾: 대전시 동구 가양동 197은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팽년(1417~1456)이 살았던 곳으로 그가 단종복위운동에 실패하여 처형당한 뒤에 연못이 메워지고 집과 정자는 헐린 후 1668년 그를 추모하는 유림들의 그의 옛집터에다 주춧돌을 모아 유허비를 세움. 그러나 이 땅의 소유자가 땅을 내어놓지 않아 비각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의 7세손인 군수 박송고가 재산을 털어 이 땅을 사들인 뒤 1672년에 비각을 세움. 비각의 이름은 그의 큰 절개를 기리는 뜻에서 장절이라고 했으며 비각을 높여 정이라고 함. 장절정을 흥료장절정이라고도 하는데 흥료는 장절정이 있는 가양동의 옛이름임. 송시열이 <회덕현흥룡장절정기>를 지음. 비각은 두

9) 허경진(1998), 대전지역 누정문학연구, 태학사.

차례 중수한 뒤 6.25사변 때에 부서지고 비석만 남아 있었는데, 박팽년의 16세손인 박상동이 비각을 다시 세웠고, 1980년 대전시에 주변의 땅 488평을 사들인 뒤에 담장을 쌓아 공원으로 가꾸었음.

3. 충청 유교문화권 공동연구

충청권의 수많은 유무형문화재 중 조선시대 양반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교문화유산이 다량 현존하고, 충청유학은 기호유학의 핵심으로 조선후기 3백년간 집권 서인당으로서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풍을 견지해왔음. 특히 대전시와 세종시는 조선시대부터 접경지로 양쪽 지역 문화권을 공유하여 왔음.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선생은 김장생 선생의 문하생으로 대전 세종시의 공통된 지역문화인물임. 이들 지역문화인물에 대한 공동연구 및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을 공동제작 교류프로그램을 갖도록 함.

1) 세종시 유교문화자원¹⁰⁾

조선시대 충절인물 스토리 간직한 곳: 김종서, 성상문, 박팽년, 김처선, 한충

충청유학을 한단계 성장시킨 유학자: 초려 이유태, 타우 이상, 전재 임헌회, 무이재 오강표, 녹문 임성주, 성기운(한말 유학자), 홍일섭(독립운동가)

충청도 양반 마을: 강화최씨 봉산리(500년 전통 마을 성시관련 정려, 영당, 묘소 등 다양한 문화유적 분포), 부안임씨 양화리(사당 누정 재실 등 문화유적 뿐 아니라 경관유적도 포함하고 있음), 남양홍씨 신대리, 진주류씨 하봉리

무인가문: 절재 김종서, 진주류씨 류형장군, 남이웅 장군, 김휴, 김훈장군, 변응정(의병장), 임난수
대전시에 비해 사당과 정려의 비중이 높음. 충절인물관 학자를 제향하는 서원과 사우 충신효자열녀의 정려 등이 다수 현존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미흡,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유교문화자원이 많음. 비지정문화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금석문과 묘역(묘와 묘비 등)으로 대부분 인물을 기념하는 유적, 인물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

향교 권역: 전의향교(1407~1413년 경 창건추정, 본래 향교의 위치는 협소한 탓에 1649년 대성전을 완공한 후 위폐를 봉안하고 법이 제정한 대로 모시게 됨), 연기향교(1407~1413년 경 창건추정, 창건 당시의 위치는 신중동국여지승람의 현에서 서쪽으로 1리 떨어져 있다고 기

남평조씨 병자일기: 조선 중기의 문신 남이웅 부인이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쓴 일기로 병자호란 때 피난길에 올라 1636년(인조14) 12월5일~1640년(인조18)8월9일까지 4년여 동안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임(2012년12월31일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4호 재지정됨)

1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15), 세종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핵심문화유산: 전의향교, 연기향교, 뇌암서원 터, 봉암서원 터(한충,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합호서원, 문절사, 봉산영당, 덕천구사우, 남산영당, 변응정 사당, 송모각, 병산사

인물: 강순용, 김경여, 김남중, 김종서, 김처선, 김휴, 남이웅, 남평조씨, 덕천군, 박안생, 박팽년, 변응정, 성삼문, 오강표, 오도일, 유지걸, 유충걸, 유형, 이덕사, 이상, 이유태, 이태연, 임난수, 임목, 임성주, 임헌회 조계원, 한충, 홍일섭 등 충효열 인물, 서원제향인물 등

무신, 문신 191명, 학행 32명, 효자 196명, 열녀 92명,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6명 - 총 517명 (연기인물지)

유물과 전적문서: 남평조씨 병자일기, 유형장군 호패, 남양홍시 연기파종종 문서 일괄, 연기향교, 전의 향교

2) 대전시 유교문화자원¹¹⁾

일찍부터 충절에 빛나는 사육신 중의 한사람인 최극헌 박팽년의 유허지와 기묘명현 중 한 사람인 충암 김정을 비롯하여 문익공 정광필, 규암 송인수 형제, 추파 송기수, 병자호란에서 순절한 죽창 이사직, 야은 송시영 등의 자취가 있어 유교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대전이 한국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17세기이후 조선 정치와 사상을 주도하는 학파를 형성했기 때문임. 당시 대전지방의 유학은 울곡 이이(栗谷 李珣)의 기호사림의 학통을 이어 받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 문하에서 수학한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과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 또한 잠야 박지계(潛冶 朴知誠)에게 사사한 탄옹 권시(炭翁 權, 1604~1672)에 의해 주도되었음.

조선후기 이들의 문하에서 많은 인물이 배출되어 이른바 호서사림(湖西士林)을 형성하게 됨. 특히 우암 송시열은 주자의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계 김장생의 학풍을 집대성하고, 예학(禮學)을 계승 발전시킴. 이러한 우암의 학문과 사상은 구한말의 위정척사 및 항일의병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제월당 송규렴(霽月堂 宋奎濂)·옥오재 송상기(玉吾齋 宋相琦), 늑천 송명흠(泉 宋明欽), 유희당 권이진(有懷堂 權以鎭) 등의 많은 명현이 배출되었고, 이들을 배향한 송현서원(崇賢書院)을 비롯한 도산서원(道山書院), 미호서원(美湖書院), 종회사(宗晦祠), 정절사(靖節祠), 용호사(龍湖祠), 집성사(集成祠), 돈파사(遯坡祠) 등의 많은 서원(書院)과 사우(祠宇)가 세워지게 됨.

한편, 유적으로는, 쌍청당(雙淸堂), 송애당(松崖堂), 사우당(四友堂), 송준길 고택을 비롯하여 동춘당(同春堂)과 비래암(飛來庵), 옥류각(玉溜閣), 송시열고택과 남간정사(南澗精舍), 기국정(杞菊亭), 송자대전장판고(宋子大全藏板庫), 삼매당(三梅堂), 봉소루(鳳巢樓), 사교루(四敎樓),

11) 대전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취백정(翠白亭), 제월당(霽月堂), 옥오재(玉吾齋), 늑천정사지(泉精舍址)등 많은 강학처와 누정(樓亭) 등의 유적이 남아 있고, 충효열(忠孝烈)에 빛나는 많은 정려(旌閭)와 명현의 묘, 비석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음.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4장

이건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이 건 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임 병 호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 남 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DAEJEON
SEJONG
FORUM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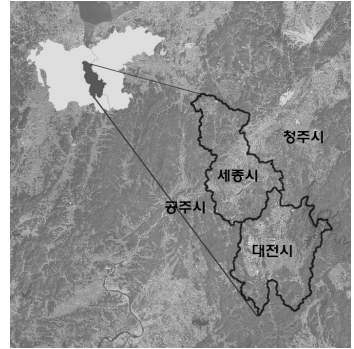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4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신도시와 기존 연기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앞으로도 10년 이상 건설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아직 세종시 도시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중심도시를 포함한 세종시는 주변 도시들과 서로 연계하면서 발전하는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전시의 경우, 세종시 건설 이후 도시·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의 인구 정체 및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종시 성장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세종시와 바람직한 모습으로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계하여 발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지난 2015년부터 상생발전 공동연구 추진, 도시의 정책연구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통합연구원 설립을 논의해 왔다. 이후 조례 제·개정작업을 거쳐 2016년 10월 31일 기존 대전발전연구원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개원하였다.

앞으로 대전시와 세종시가 한 단계 발전하고, 상호 연계 및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두 도시를 공동연구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대전시 및 세종시의 도시여건과 교류실태를 살펴보고,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상생발전방안, 그리고 앞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이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 대전·세종시의 위치

Ⅱ. 대전시·세종시의 현황과 전망

1. 공간적 여건

대전시 서북측과 세종시 남동측 행정구역은 공간적으로 인접하고 있다. 대전시청에서 세종시청까지 직선거리는 약 17km이며, 자동차 이동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대전시와 세종시의 연접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가화지역이 연접되어 있지 않다. 시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전시 노은동(반석 7단지)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2km이다.

2. 대전·세종시의 도시기능 비교

통계연보를 기초로 대전시와 세종시 주요 도시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5년 기준 대전시 인구는 약 153.8만 명이며, 세종시 인구는 약 20.4만 명 수준으로 면적 상으로는 1.2배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약 7.5배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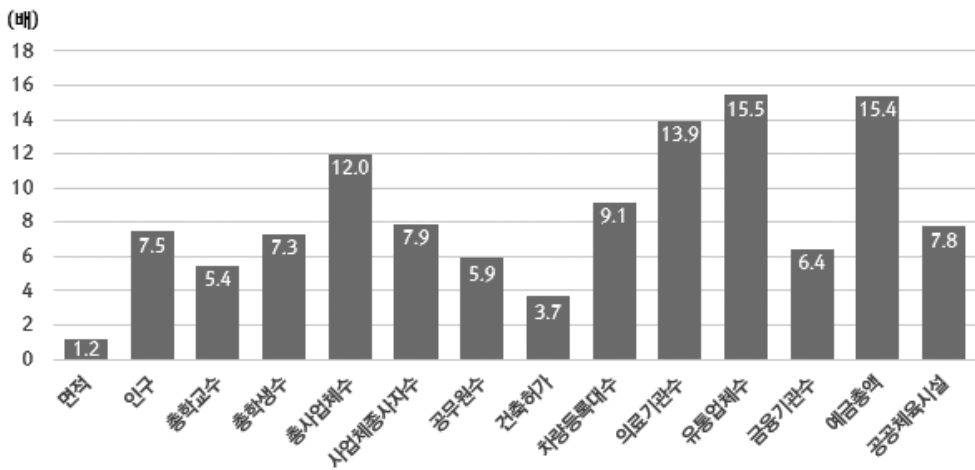
그 밖에 주요 부문을 비교하면 경제활동인구는 7.1배, 총학생수는 7.3배, 총사업체수는 12.0배, 공무원수는 5.9배, 차량등록대수는 9.1배로 대부분 5~15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증가할수록 양 도시간 지표 및 환경 격차는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대전시와 세종시의 현황 비교

구분	대전	세종	대전/ 세종	구분	대전	세종	대전/ 세종
면적(km ²)	539,28	464.9	1.2	공무원수(명)	7,172	1,216	5.9
인구(명)	1,538,394	204,088	7.5	상수도(백만m ³)	177.0	12.9	13.7
가구수(가구)	588,395	76,419	7.7	건축허가(동수)	3,600	977	3.7
전입전출자(명)	487,956	79,596	6.1	차량등록대수(대)	621,035	67,881	9.1
경제활동인구(명)	792,000	111,000	7.1	의료기관수(개소)	2,125	153	13.9
유치원수(개소)	268	43	6.2	의료인수(명)	17,124	942	18.2
초등학교수(개소)	146	35	4.2	위생관계업소(개소)	33,197	3,202	10.4
중학교수(개소)	88	17	5.2	식품접객업소(개소)	24,082	2,530	9.5
고등학교수(개소)	62	13	4.8	유통업체수(개소)	93	6	15.5
전문대학(개소)	5	1	5.0	금융기관수(개소)	212	33	6.4
대학(교)(개소)	12	3	4.0	예금총액(10억원)	25,693.0	1,667.4	15.4
총학생수(명)	355,945	48,592	7.3	공연시설(개소)	28	1	28.0
총사업체수(개소)	109,535	9,124	12.0	공공체육시설(개소)	344	44	7.8
사업체종사자수(명)	556,297	70,661	7.9	국세징수(십억원)	3,356.5	679.0	4.9

자료: 대전시·세종시 통계연보(2015), 2014년 기준
 주: 인구 및 가구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임

〈그림 2〉 대전-세종시의 도시기능 여건 비교(2015년 기준)



주: 대전시/세종시 비교수치임(예: 대전시 면적=세종시 1.2배)

3. 대전시·세종시의 인구이동 동향

1) 전입·전출 동향

2015년 대전시 전입·전출인구는 총 182,946명(시내 전입·전출 제외)으로, 전입-전출에 따른 순이동은 총 -20,616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31,581명(17.3%), 경기 30,620명(16.7%), 세종 29,472명(16.1%), 서울 27,012명(14.8%) 등의 비중이 높다. 순이동 결과를 비교하면,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는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지만, 주요 전입·전출 지역인 세종(-22,104명), 서울(-106명), 경기(-88명), 충남(-479명), 충북(-516명)에서는 모두 전출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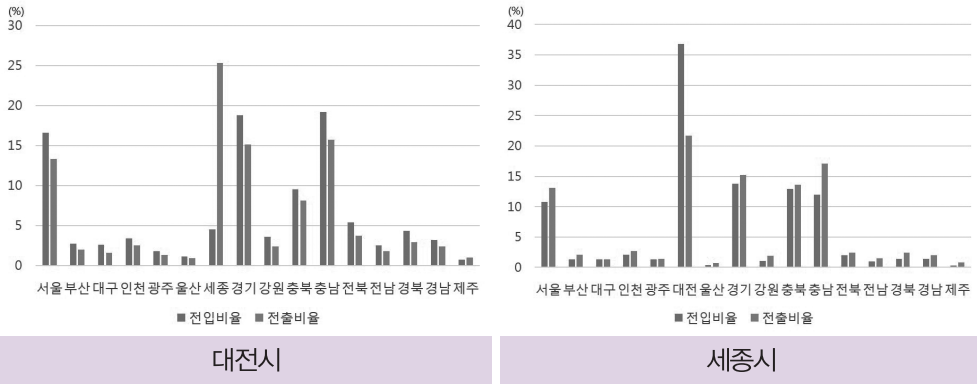
〈표 2〉 대전·세종시의 전입·전출 동향

구분	대전시					세종시					
	전입	전출	합계		순이동	구분	전입	전출	합계		순이동
			명	%					명	%	
서울	13,453	13,559	27,012	14.8	-106	서울	7,550	2,228	9,778	11.2	5,322
부산	2,209	2,054	4,263	2.3	155	부산	929	364	1,293	1.5	565
대구	2,085	1,667	3,752	2.1	418	대구	879	219	1,098	1.3	660
인천	2,756	2,516	5,272	2.9	240	인천	1,496	451	1,947	2.2	1,045
광주	1,481	1,321	2,802	1.5	160	광주	926	236	1,162	1.3	690
울산	890	939	1,829	1.0	-49	대전	25,788	3,684	29,472	33.9	22,104
세종	3,684	25,788	29,472	16.1	-22,104	울산	306	116	422	0.5	190
경기	15,266	15,354	30,620	16.7	-88	경기	9,672	2,585	12,257	14.1	7,087
강원	2,902	2,423	5,325	2.9	479	강원	765	316	1,081	1.2	449
충북	7,749	8,265	16,014	8.8	-516	충북	9,061	2,308	11,369	13.1	6,753
충남	15,551	16,030	31,581	17.3	-479	충남	8,384	2,905	11,289	13.0	5,479
전북	4,396	3,766	8,162	4.5	630	전북	1,422	411	1,833	2.1	1,011
전남	2,019	1,798	3,817	2.1	221	전남	699	251	950	1.1	448
경북	3,508	2,914	6,422	3.5	594	경북	977	403	1,380	1.6	574
경남	2,613	2,420	5,033	2.8	193	경남	962	344	1,306	1.5	618
제주	603	967	1,570	0.9	-364	제주	188	139	327	0.4	49
합계	81,165	101,781	182,946	100.0	-20,616	합계	70,004	16,960	86,964	100.0	53,044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2015)
 주: 순이동은 '전입-전출'을 의미함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세종시 전입·전출인구는 총 86,964명으로, 대전 29,472명(33.9%), 경기 12,257명(14.1%), 충북 11,369명(13.1%), 충남 11,289명(13.0%), 서울 9,778명(1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당초 의도했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인구분산 효과 보다는 대전, 충남, 충북 등 인근 지역에서의 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종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동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전 22,104명, 경기 7,087명, 충북 6,753명, 충남 5,479명, 서울 5,322명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대전·세종시의 전입·전출 비율 비교



자료: 통계청 인구센서스(2015)
 주: 비율(%)은 전체 전출입인구에 대한 점유비율(시내 전입전출 제외)을 의미함

2) 대전시-세종시간 인구이동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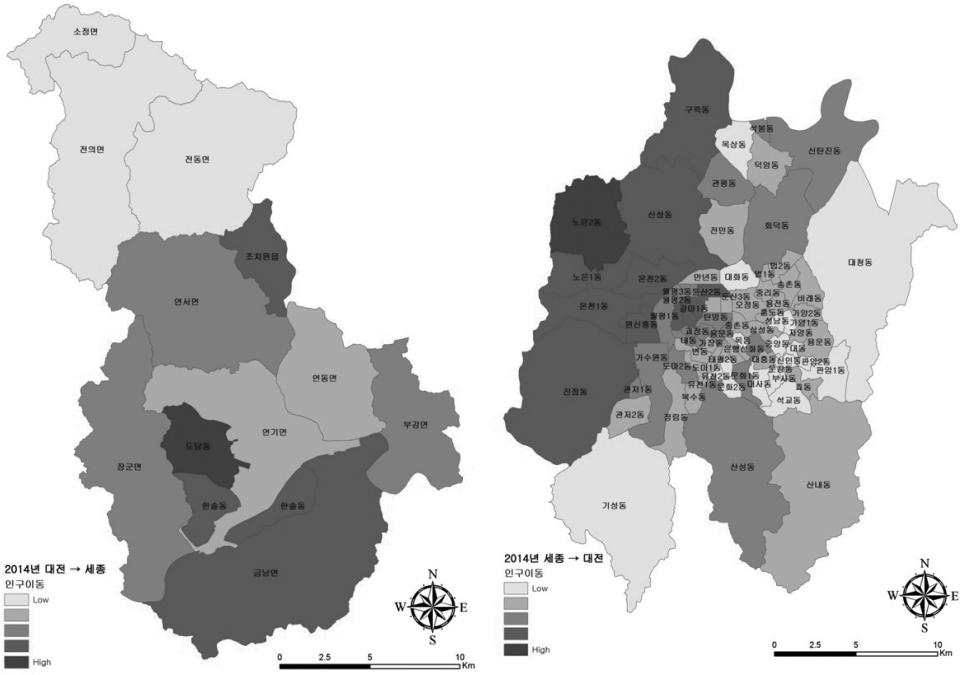
(1)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이동

2014년 기준 대전시에서 세종시 전출자의 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포함된 도담동으로의 전입이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한솔동과 대전시와 인접한 금남면 그리고 기존 시가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원읍으로의 전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종시에서 대전시로의 이동

2014년 기준 세종시에서 대전시 전출자의 동별 분포를 살펴보면, 세종시와 접하고 있는 유성구로의 전입이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노은 2동으로의 전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한편 유성구 외에는 둔산 2동 등 일부 둔산지역으로의 전입도 진행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4〉 대전시-세종시간 인구이동 패턴



대전 →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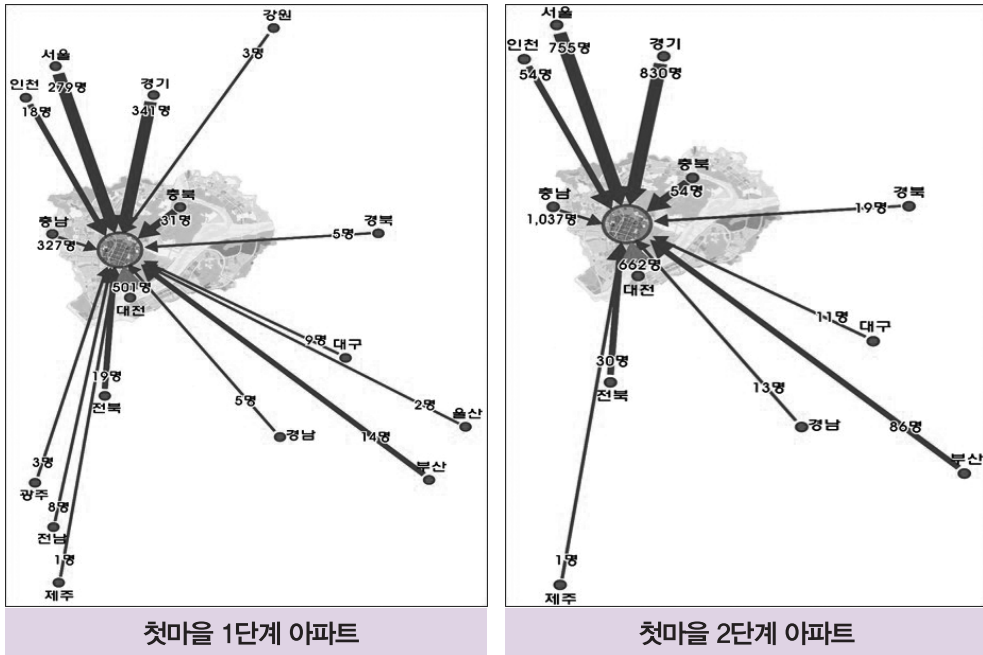
세종 → 대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3)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공급 영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에 진행된 첫마을 아파트의 입주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첫마을 1 단계 아파트는 대전시에서 501명(32.0%), 2단계 아파트는 662명(18.5%)이 계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경기 계약자수와 비교할 때, 수치는 낮지만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호한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대전시민이 세종시로 이주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계약 현황



자료:대전발전연구원(2014),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 수립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도시간 이주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거주지·직장 이동이 편리한 근거리 중심으로 도시간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공유하는 생활권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대전시·세종시의 성장 전망

장래 대전시·세종시는 어느 정도 인구규모로 성장하게 될까? 이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전시와 세종시의 장래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의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인구 외에 주요 도시기능인 경제활동인구, 지역총생산, 재정, 공원녹지면적, 주택규모 등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20년 대전·세종권 인구규모를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가 452 그리고 서울·인천권은 595로 약 4~6배 정도 차이가 있다. 한편, 대전세종권에 공주시와 청주시를 포함한 충청중심권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충청중심권 인구를 100으로 볼 때, 서울시는 294, 서울·인천권은 387(약 3~4배 수준)로 그 차이가 다소 감소한다.

〈표 3〉 기본계획상의 대전·세종 및 주요 지역과의 지표 비교

구분	도시·지역								
	충청권					수도권			동남권
	대전	세종	대전 세종	공주+ 청주	충청 중심권	서울	인천	서울+ 인천	부산
인구(천명)	1,750	416	2,166	1,170	3,336	9,798	3,100	12,898	3,900
경제활동인구(천명)	1,026	221	1,247	627	1,874	5,174	2,108	7,282	2,205
지역총생산(천억원)	321	-	-	420	741	2,173	1,599	3,772	-
재정(십억원)	4,109	855	4,964	3,482	8,446	29,943	22,970	52,913	10,093
공원녹지면적(km ²)	27.6	19.8	47.4	103.03	150	174.5	55.5	230	33.7
주택(천호)	747	-	-	453	1,200	3,309	1,202	4,511	1,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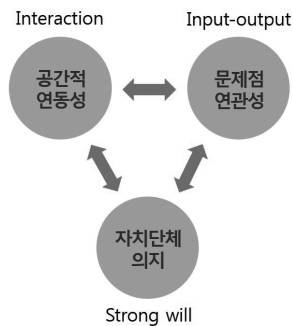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대전·세종의 규모를 합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미약하지만, 충청중심권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격차가 감소하여 중부권 내에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세종의 상생을 통해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국토공간 내에서의 지역 위상을 높여야 하는 필요가 여기에 있다.

Ⅲ. 대전·세종시의 상생발전전략

1. 상생발전이란?

사전적 의미에서의 '상생'이란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살아감'을 이르는 말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상생발전'이란 '여럿이 상생하면서 보다 좋은 상태로 전개되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상생발전 요건은 공간적 관계와 연관성, 그리고 자치단체의 의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상생발전의 개체들은 상호 공간적 연동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상생발전의 개체들은 도시의 문제점과 과제 등에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상생발전의 개체들은 상생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림 6〉 상생발전 추진 요건

2. 기존 계획에서의 논의

그 동안 세종시 출범에 앞서 대전시·세종시의 상생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013년 수립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변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중부권 중심도시’를 주요 핵심이슈로 설정하고, 광역권 중심도시기능 강화, 주변도시간 연계교통시스템 구축, 세종시 주거수요에 대응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대전발전연구원(2008)에서는 상생방안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대덕특구 내 규제 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 SOC 확충, 각종 인프라의 공동 활용방안, 지역자원의 공동이용 및 관리방안 등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부 및 세종시 측면에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국무총리실, 2012)에서는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지속 성장과 함께 ‘주변도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2014년 수립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역·세대·계층간 조화로운 상생도시’를 5대 미래상 중 하나로 설정하고, 상생도시 추진전략으로 생활권간 연계 및 교류 강화, 읍면지역과 건설지역의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 대전·세종시 상생발전방안을 종합하면,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전시와 세종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생발전의 ‘목표’ 등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기 제시된 상생발전방안은 통합적 연계를 고려하여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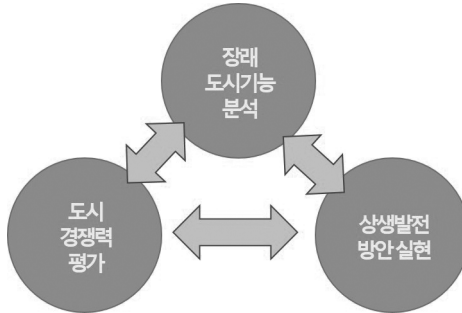
〈표 4〉 기존 계획에서의 상생발전방안 종합

분야	상생발전방안
대전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시설 연계 활성화 추진 운영 • 대전시-세종시간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 중부권 최고의 문화시설 활용 문화향유 제공 • 도시간 스포츠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행정중심복합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 대전의 수돗물 It's 水 세종시 공급 • 세종시 하수처리 통합관리 방안 • 금강수질 개선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 SOC 확충 : 첨단교통시스템, 녹색교통네트워크 • 각종 인프라 공동활용방안: 컨벤션시설, 종합운동장, 유통단지
정부 및 세종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발전체계 구축 • 도시간 광역적 시설 연계·협력 강화 및 역사·문화·휴양공간 조성 지원 • 도시기반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 주요 시설의 연계 활용 • 지역별 기능특화 및 지역간 광역연계 방안 • 법적·정책적으로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추진기구 설립

3.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상생발전전략과 과제

1)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상생발전전략

그렇다면,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어떠한 분야에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장래 도시기능을 분석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실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상생발전 분야

(1) 도시기능 측면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상생발전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영역은 도시기능 측면이다. 도시기능 측면에서의 상생발전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대전시와 세종시는 개별적으로 도시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하나의 도시권(광역권)을 형성하고 도시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도시(지역)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전시와 세종시는 도시적 역량 측면에서 경제부문에서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추진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경쟁력 향상 측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세종권의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역량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하여 크게 미진하며, 세종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도 그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함에도 대전·세종의 상생을 통해 국토 내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강화를 유도하고, 분야별 전략방안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급 인력의 적극 활용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는 대형 SOC 및 컨벤션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전·세종

권의 성장을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의 위상 제고 및 기능 강화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세종시 특화 차원에서 중앙행정과 연관된 기능, 즉 컨벤션, 회의, 호텔 등 관련기능이 보완되어야 하며, 대전·세종간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3) 상생발전방안 추진 측면

아무리 실현가능한 상생발전방안을 도출하더라도, 구체적인 추진체나 동력이 마련되지 않아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많은 계획과 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상생방안 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추진체를 구성해야 한다.

실제로 대전충청권에서는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거버넌스는 정책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재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의체(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이 확대 출범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대전시·세종시의 긍정적인 상생발전 체계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과제

대전세종연구원은 앞으로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중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이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구이동에 관한 대응과제가 필요하다. 인구이동은 세종시 건설 이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이동에 대하여 두 지역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대전시와 세종시간 인구이동 및 상생방안”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관리 및 기능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행정구역 상 인접하고 있어, 시민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거의 동일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두 광역자치단체를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장래 계획적 성장과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래 도시성장을 위한 동력기능 확보 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연구 및 첨단과학)와

세종시(중앙행정)는 국가의 핵심적 기능이 밀집한 도시이다. 또한, 주변의 청주, 천안, 공주 등은 각기 특화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유기적인 기능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기능(시설)을 유치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원고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전략과 새롭게 출범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도시의 상생발전은 도시 자체의 경쟁력 제고와 광역도시체계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전략과도 맞물린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전·세종권이나 충청중심권 등 권역을 형성하여, 도시(지역)의 역량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이 진행될 경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두 도시가 많은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공간 조성이라는 공통적 과제를 위해 두 지자체가 합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두 도시의 상생협력과 도시발전을 위한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도시(지역) 통합적 차원에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심층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 2013,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 대전발전연구원, 2014,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방안 수립연구.
- 대전발전연구원, 20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전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세종특별자치시, 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 토지주택연구원, 2014,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 수립연구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의 도시안전 현황과 정책방향

5장

임윤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의 도시안전 현황과 정책방향

임윤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DAEJEON
SEJONG
FORUM

I.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도시거주 인구 비율은 이미 90%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재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의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범죄나 각종 사고와 같이 사람에게 기인하는 사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도시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고는 과다한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과밀화에 기인한다. 특히 주택난, 교통난, 실업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족 해소방책으로 과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 유형을 변화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는 지역의 공동체 의식 약화와 익명성을 증가시켰고, 같은 단지 또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도 무관심해져 거주자, 방문자, 침입자의 구분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파편화는 주거지역 내에서 용이한 범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기회도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교통안전, 화재안전, 산불안전, 가정생활에서 안전, 가정 내 및 놀이터 등지에서의 어린이 안전, 산업안전, 스포츠 안전, 물놀이 안전, 공공장소 안전, 성폭력 안전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도시안전 관리대책은 사고처리 및 2차피해 예방 뿐 아니라 예방위주의 방재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전 재난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적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도시안전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간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 지향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특히 GNP 2만불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 양적인 요구에서 질적인 요구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안전의 내용적인 측면도 전통적인 자연재해로 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의 성장지표 중 도시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 과학 중심도시였던 대전광역시도 최근 국가기능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화의 선두로 도약하고 있다. 이는 행정이나 경제 등 도시의 기능이나 외형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다.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안함과 이곳을 방문한 내·외국인의 편리함 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두 도시도 안전분야에 있어서만은 소외계층과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도시를 조성해야만, 진정한 국제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현재의 지역안전지수를 근거로 한 도시안전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광역적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앞으로 안전도시를 위해 나아갈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대전·세종의 지역안전도

1. 지역안전지수 개념 정의 및 특성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로, 위해지표(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를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를 경감)로 구분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지수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총 7개 분야로써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위해지표는 분야별 사망자수·발생건수 등 결과지표를 의미하며, 취약지표는 위해발생의 인적·물적 요인이 되는 지표들로서 재난약자, 하천면적, 기초수급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감지표는 위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로서 구조구급대원수, 의료기관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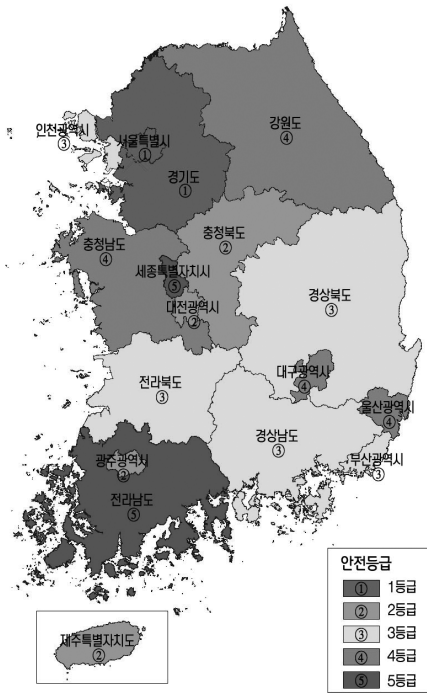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전지수 등급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안전지수가 높다는 것(1등급)은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이며, 시·도, 시·군·구 유형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안전수준, 보완해야 할 안전 분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에 '13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화재,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를 시범 공개한 이후, 동년 11월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7개 분야 안전지수를 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여 대전시와 세종시의 안전수준을 가름해보고자 한다.

2. 지역안전지수에 의한 지역특성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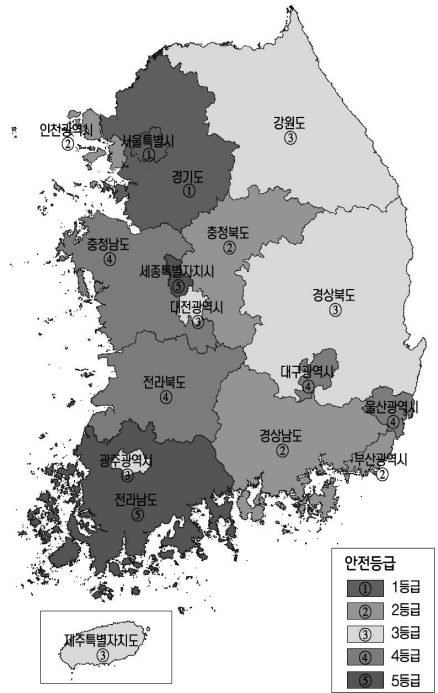
1) 광역시도별 현황

안전지수는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구분되어 공개되고 있는데, 특별·광역시의 경우, 화재·교통사고 분야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 분야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리고 감염병 분야는 울산광역시가 1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자연재해 분야를 제외하고는 2~3등급으로 나타나, 대전 및 세종시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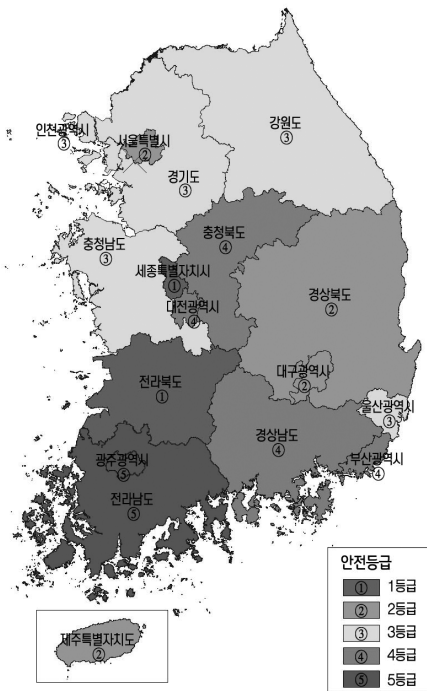
다만, 세종시의 경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의 경우,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어 이 부문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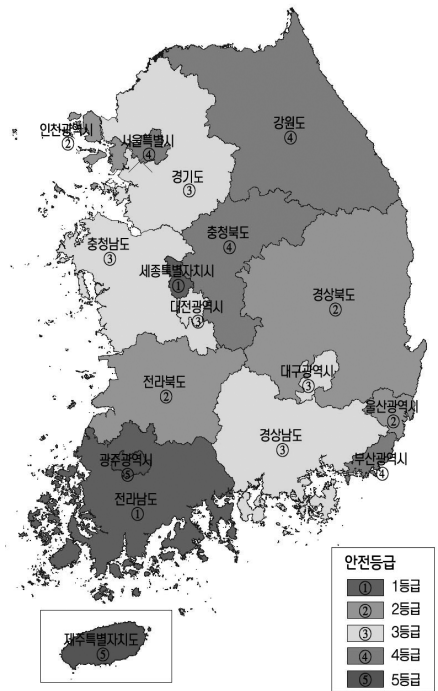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시도별 화재분야 안전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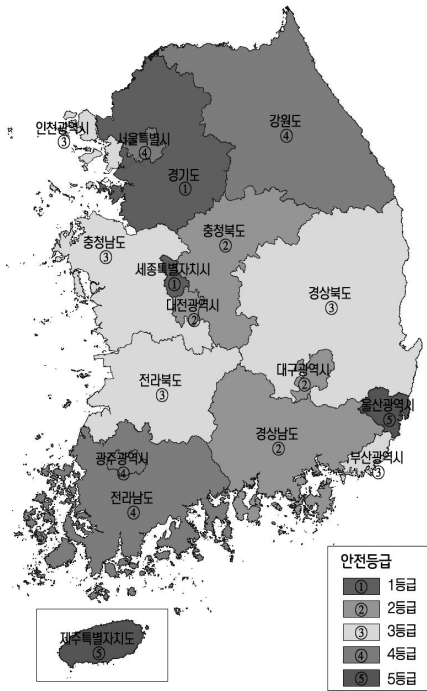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시도별 교통분야 안전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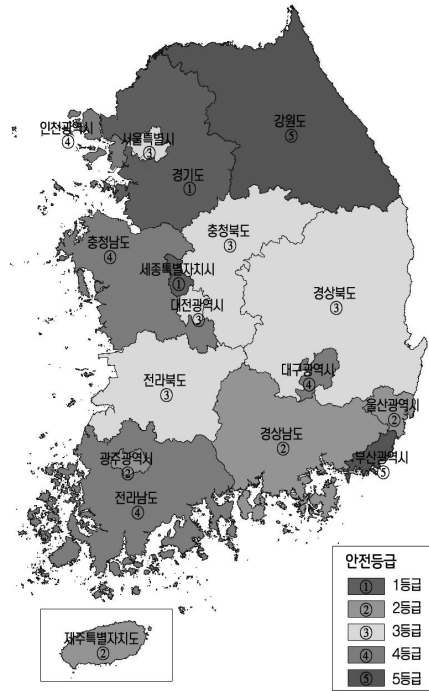
〈그림 3〉 전국 시도별 자연재해분야 안전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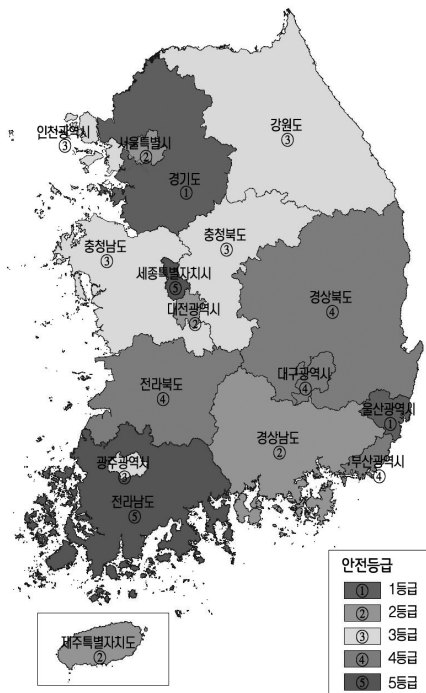
〈그림 4〉 전국 시도별 범죄분야 안전등급



〈그림 5〉 전국 시도별 안전사고분야 안전등급



〈그림 6〉 전국 시도별 자살분야 안전등급



〈그림 7〉 전국 시도별 감염병분야 안전등급

대전시의 경우는 화재 및 안전사고, 감염병을 제외한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 자살사고 분야에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안전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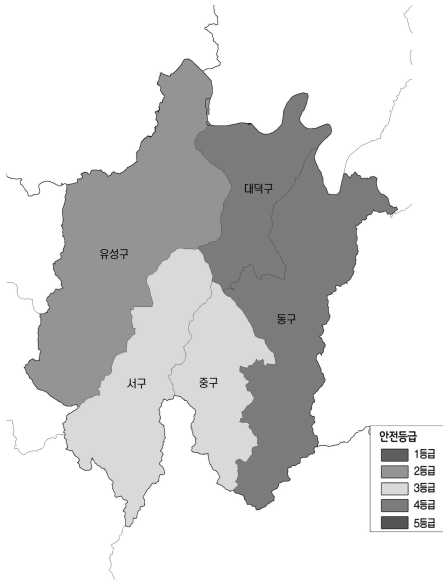
2) 시·군·구별 현황

대전시의 구별 지역안전지수 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는 유성구가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서구의 경우 자살 분야에서 1등급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동구, 중구, 대덕구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전등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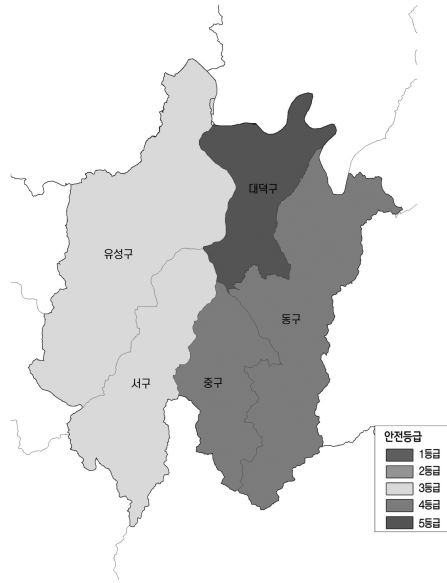
특히, 교통사고분야에 있어서는 대덕구가 가장 낮은 5등급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자연재해 분야는 동구가 가장 낮은 등급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화재분야에서는 대덕구와 동구가, 교통사고분야에서는 동구와 중구가,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유성구와 대덕구가, 범죄분야에 있어서는 동구와 중구가, 안전사고 분야에 있어서는 유성구, 동구, 중구가, 자살분야에 있어서는 대덕구와 동구가,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는 동구 및 중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등급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7대분야별 1등급 자치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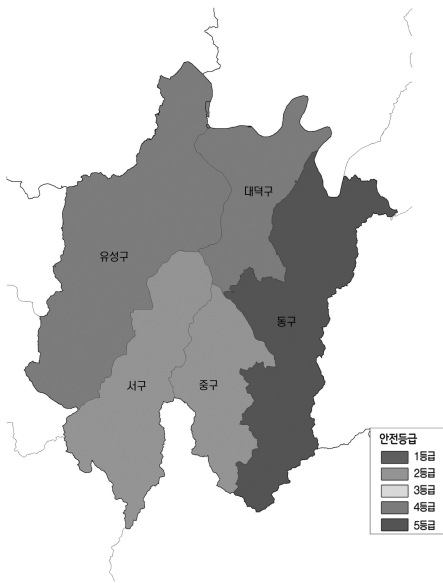
구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화재	서울	경기	수원, 군포,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의왕	달성, 기장, 울주, 증평, 정선, 양구, 고성, 울릉	구로, 동작, 부산북, 연수, 부평, 계양, 울산북
교통사고	서울	경기	수원, 군포,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구리,	달성, 기장, 옹진, 울주, 증평, 화천, 칠곡, 울릉	송파, 광진, 종량, 양천, 동작, 강동, 부평
자연재해	세종	전북	고양, 김포, 속초, 김천, 영주, 상주, 양산	달성, 옹진, 영동, 진안, 무주, 임실, 고령, 창녕	종로, 성동, 광진, 마포, 관악, 대구중, 울산남
범죄	세종	전남	과천, 남양주, 의왕, 용인, 계룡, 남원, 상주	옹진, 진안, 임실, 순창, 신안, 영양, 울릉, 합천	도봉, 수성, 연수, 계양, 인천서, 유성, 울산북
안전사고	세종	경기	수원, 군포,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전주	달성, 기장, 증평, 음성, 홍성, 무안, 영광, 칠곡	송파, 양천, 강동, 대구서, 연수, 부평, 계양
자살	세종	경기	군포, 과천, 의왕, 용인, 화성, 계룡, 거제	달성, 옹진, 울주, 증평, 화천, 양구, 무안, 울릉	송파, 광진, 서대문, 양천, 서초, 대전서, 유성
감염병	울산	경기	수원, 과천, 오산, 용인, 화성, 계룡, 거제	달성, 기장, 울주, 증평, 화천, 진천, 칠곡, 울릉	송파, 서초, 인천서, 유성, 울산남·동·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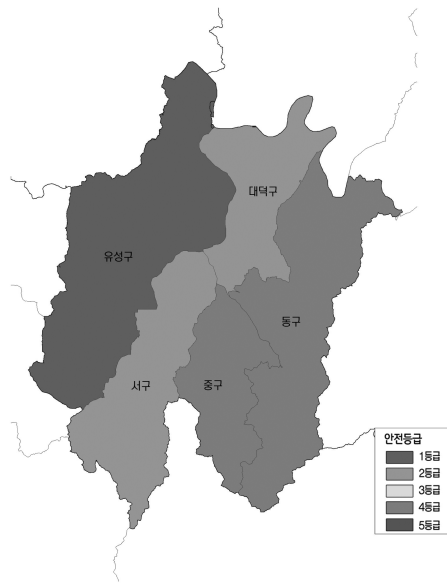
〈그림 8〉 자치구별 화재분야 안전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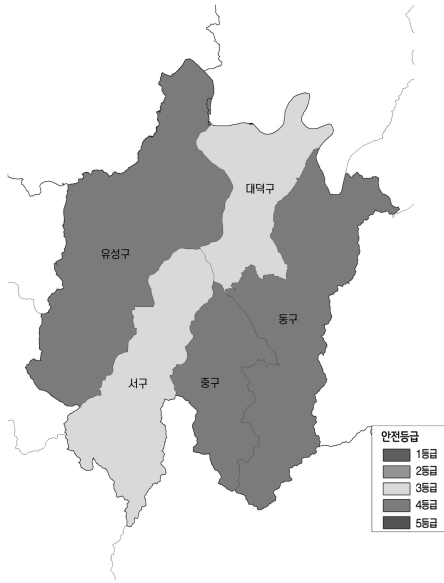
〈그림 9〉 자치구별 교통사고분야 안전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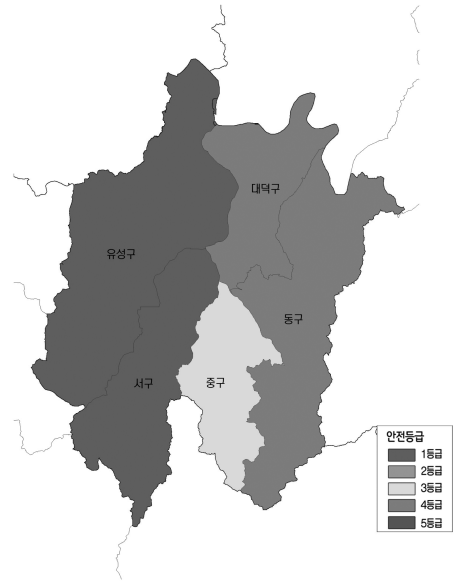
〈그림 10〉 자치구별 자연재해분야 안전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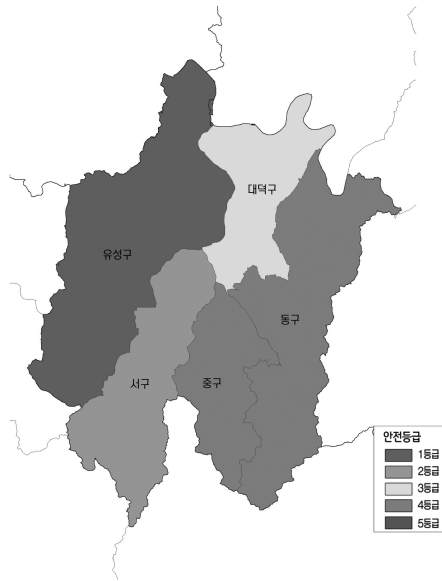
〈그림 11〉 자치구별 범죄분야 안전등급



<그림 12> 자치구별 안전사고분야 안전등급



<그림 13> 자치구별 자살분야 안전등급



<그림 14> 자치구별 감염병분야 안전등급

대전시 5개 자치구별 상대적 안전취약 분야는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자연재해, 화재사고 분야로 나타났고,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덕구 중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안전은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자치구의 재정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들 자치구에 대해 우선적인 안전 관련 예산 배분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자치구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2015년 기준)

연번	시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
1	동구	4	4	5	4	4	4	4
2	대덕구	4	5	4	2	3	4	3
3	서구	3	3	2	2	3	1	2
4	유성구	2	3	4	1	4	1	1
5	중구	3	4	2	4	4	3	4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Ⅲ. 대전·세종 도시안전의 정책방향

1. 재난안전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1) 재난 안전사고원인의 다원화와 불확실성의 증가

현대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재난안전 사고의 발생원인과 형태가 점차적으로 “다원화·다양화” 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사이버 범죄 등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재난안전 관리체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사고들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복되는 재난안전 사고의 원인이 단일적 사유가 아닌 환경적·제도적 등 다양한 사유에 발생하는 만큼 부문간, 지역간 협력적 대응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재난안전 관리범위의 확대와 기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이 요구된다.

최근 대전시와 세종시도 위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법률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한 부서별 책임제, 즉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 기관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

서는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그에 따른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통합적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사고의 대응·복구중심에서 예측·예방중심의 관리로

과거에 발생했던 재난안전 사고와는 다르게 최근 발생하는 재난안전 사고는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피해액과 피해복구예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안전관리는 기본적 국민의 안위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대책과 예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래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미래이슈분석이 필요하다. 사회가 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또한 변화되어 왔으며, 안전대책 역시 변화하는 사회 위협요소들에 따라 사전예방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대규모 재난재해와 각종 인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3) 산발적·분산적 대응에서 통합적·전방위적 대응으로

앞으로는 반복되는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문제 등에 단발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체계적·통합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관리에 있어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에 따른 연계체계의 구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고 유형에 따른 주무부서와 지원부서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상황관리의 중복투입이나 불명확한 책임소재 등 통합적 지휘체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제정 문제가 크므로, 통합적이며 체계화된 안전관리 기반구축과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계대안으로서는 현장의 집행적 기능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의 평가 및 지원기능을 통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구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대시민 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인식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법제적 관리에서 ICT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로

대규모 재해나 사건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전달이 가장 시급한 행동이며, 필수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최근의 재난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기존 재난안전관리에서 탈피하여 ICT를 접목하는 혁신적·과학적 안전행정 관리가 요구된다.

재난재해나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 분석·예측과 상시 모니터링 등에 다양한 기술과 알고리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ICT의 접목이 요구되고 있다. ICT는 일련의 대처(예방·대비·대응·복구)를 지원하는 주요 툴이므로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ICT분야와의 접목이 필수라 할 수 있다. 행정에서는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CT를 이러한 방재와 위기관리를 위한 지역·조직 간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보공유 지원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과학적 재해분석과 예측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ICT를 계량적 수치와 추이, 분포 등 통계학적 분석과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ICT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 업무 여건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현장 및 시민공감형 재난관리 정보 공유체계 구축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안전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5) 행정주도적 안전관리에서 시민참여형 안전관리로

과거에는 행정중심의 안전관리였지만, 최근에는 시민이 각종 안전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행정과 상호 협력하여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련 담당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제고시키기 위해 포털 운영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인 민·관간, 민·민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주민의 수요지향적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행정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활동 정보나 유사시 행동강령 등을 평상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참여 확대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획단계에서의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

2. 대전·세종 도시안전의 미래 전략

광역권의 범위에서 두 도시의 안전분야에서는 두 도시의 특성에 어울리게 안전한 스마트 안전도시로 비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답게 ICT를 활용한 효과적인 도시안전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이 근간에는 안전에 있어서 소외계층과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로는 “협업을 통한 예방중심의 도시안전공동체 구축”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과 1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3대 전략을 설명하자면 첫째로 선제적 예방중심의 도시안전기반 조성이다. 재난안전사고의 원인과 징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안전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재난안전 교육 및 주민 자율 안전점검 활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5대 강력범죄 저감을 위해 효과가 입증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중심의 도시안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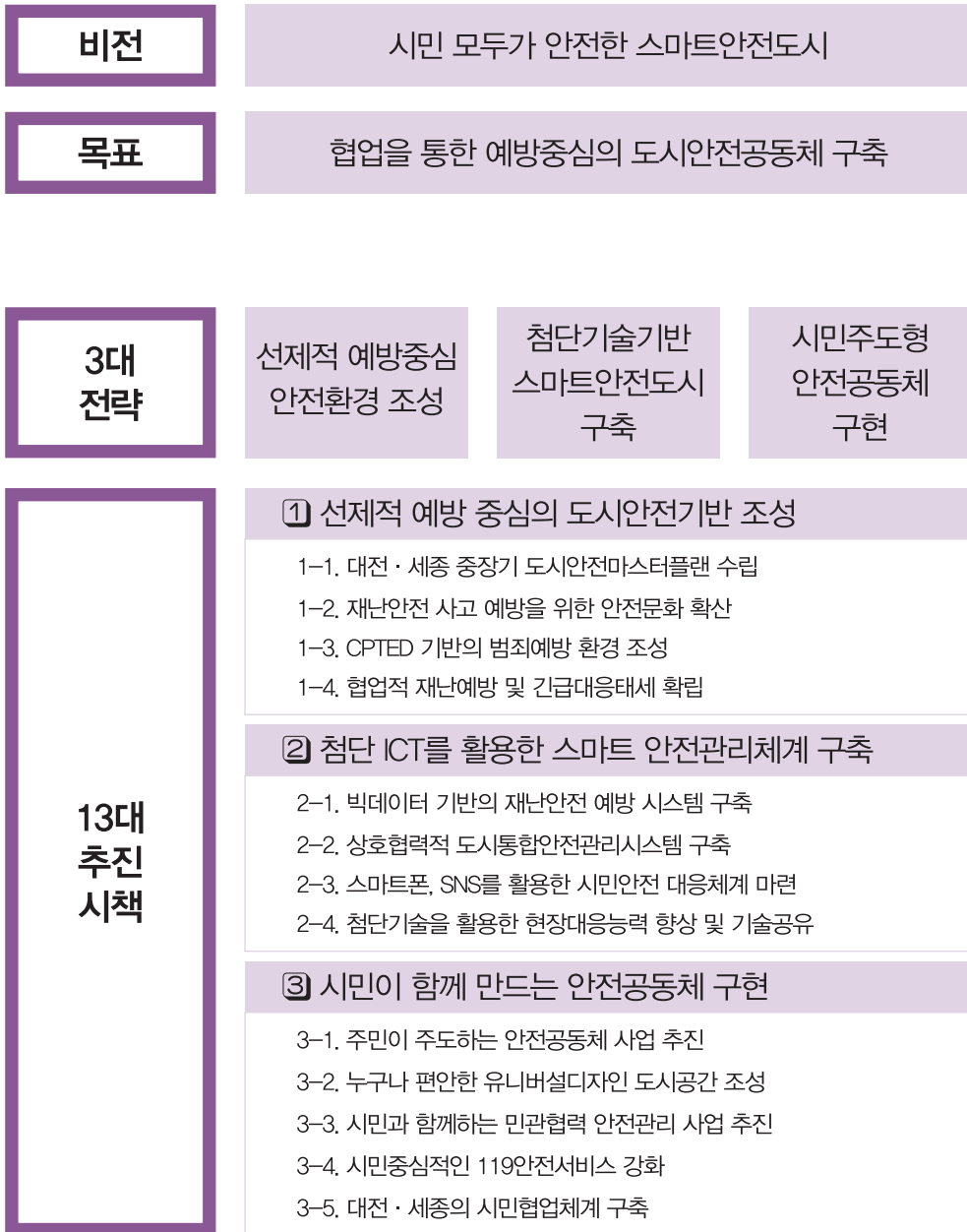
둘째로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측·대비 능력을 향상하고, 복잡하게 산재된 재난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 효율을 증진하여야 한다. 더욱이 스마트폰·SNS 등을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로 양도시가 협업하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공동체 구현이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안전하며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안전이슈에 주민들 스스로 공동 대응하는 안전공동체 사업과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관리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협력·상생하는 안전공동체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단위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도시라 함은 재난과 재해가 적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체계의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정책을 도입한다면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심정지 환자의 응급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생존퇴원율을 선진국 수준인 13%대로 10년 안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시의 방법정책에서 상호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GIS나 Big Data와 같은 IT기술에 기반하여 시공간적인 범죄특성을 연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예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인접 도시간 CCTV 영상자료의 연계 등은 범죄자의 도주경로 분석 등 과학적 수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한 후 수배차량 DB와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검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바 인접 지역간 DB의 공유와 행정적 공조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대전 · 세종 도시안전 주요 추진시책

Ⅳ. 대전·세종 도시안전의 정책방향

최근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후진적 반복적 안전사고 증가로 안전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활동 관점의 도시경쟁력이 관심을 끌었다면, 최근에는 시민의 정주관점에서 직접적인 삶의 질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안전한 도시생활의 영위라는 부분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다. 이에 MB정권부터 중앙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이 행정중심의 전통적 재난관리에서 탈피하여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세종시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인접한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호협력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 정착 초기 부족한 도시 인프라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들은 두 도시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교통, 환경, 문화 부문 등에 있어서 도시시설(인프라)의 공동 이용과 의료, 범죄예방, 여가 및 관광 등 도시서비스의 상호협력은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에는 도시기능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한편, 인접한 기존 도시에는 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도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화하는 안전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새로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전략을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재난의 분야가 폭 넓은 만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은 과거의 안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분야별 사고의 발생특성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먼저 대전시와 세종시의 안전 현황을 살펴보았다.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나 행정적·제도적 수준이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후진적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난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물질적 풍요와 성장만이 아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안전수칙부터 실천해 사회전체에 안전을 우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재정적 뒷받침은 사전예방 관리체계로 정책을 전환되어야만 보다 재난대응의 역량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 상생발전을 위한 교통현황과 개선과제

6장

이 범 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정 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 상생발전을 위한 교통현황과 개선과제

이 범 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정 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DAEJEON
SEJONG
FORUM

I. 들어가는 글

세종시의 인구는 2012년 113,117명에서 2016년 10월 현재는 238,53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은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일각에서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경합과 대립 구조에서 탈피하여 연계와 협력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두 도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의 주민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세종간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통행에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개원을 계기로 대전과 세종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교통체계 개선방안

1. 대중교통체계 개선

대전과 세종간의 주요 광역대중교통수단은 광역 BRT(버스)가 있다. 유성-세종-오송 광역 BRT(990번)가 2013년 4월 운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대전역-세종-오송 광역 BRT(1001번)와

반석역-세종-조치원 광역버스(1000번)가 운행되었다.

대전-세종 대중교통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 일평균 8,248명 이던 대중교통이용객은 최근 18,09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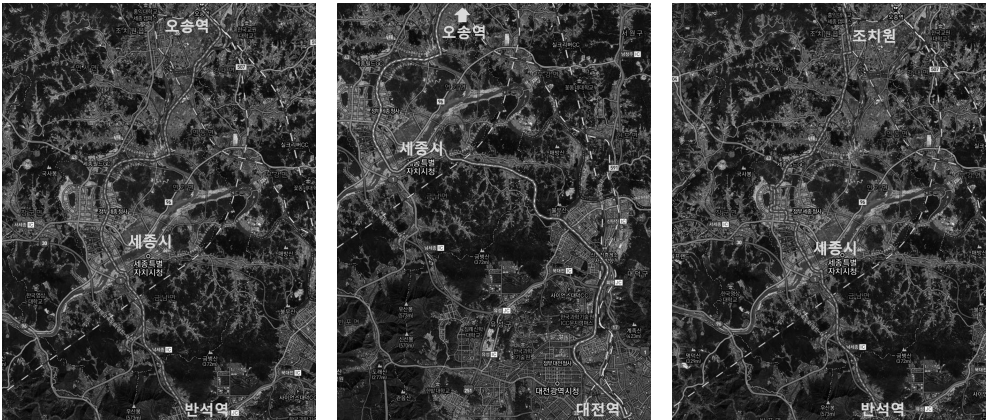
〈표 1〉 대전-세종 광역대중교통수단 현황

구분	차량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	소요시간
유성-세종-오송 BRT(990번)	27대	129회	5-10분	50분
대전역-세종-오송 BRT(1001번)	11대	59회	15-17분	70분
반석역-세종-조치원 광역버스(1000번)	9대	52회	20분	70분

〈표 2〉 대전-세종 대중교통이용객 현황

구분	2014년	최근	비고
유성-세종-오송 BRT(990번)	8,248명	11,533명	2015.12.
대전역-세종-오송 BRT(1001번)	-	3,419명	2016.10.
반석역-세종-조치원 광역버스(1000번)	-	3,146명	2016.10.
계	8,248명	18,098명	

〈그림 1〉 대전-세종 광역대중교통수단 노선도



유성-세종-오송 BRT(990번)

대전역-세종-오송 BRT(1001번)

반석역-세종-조치원 광역버스(1000번)

그러나 대전-세종간 대중교통 이용객은 도로 이용객 보다 매우 많은 실정으로 아직은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대전-세종(시청기준)간 통행시간은 도로를 이 용할 때보다 대중교통 이용시 약 2배 이상 많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배차간격의 단축, 통행 속도 향상 등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표 3〉 대전시청-세종시청 통행소요시간

구 분	통행거리(km)	소요시간(분)	비 고
승용차 이용	27.2	31	2.3배
대중교통 이용	27.3	70	

둘째 광역대중교통수단과 대전시·세종시 시내버스간 원활한 연계가 이뤄져야 하나 환승이 불편한 실정으로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배차간격의 조정, 환승정류소의 건설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환승요금은 무료환승제가 시행되고 있어 편리). 특히 세종시의 경우 아직 버스노선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도시내 곳곳을 순환할 수 있는 노선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유성 반석역에서 세종, 조치원으로 가는 990번과 1000번 광역버스의 경우 노선거리가 길고, 통행속도가 높은 도로를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버스가 투입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바이모달트램, 2층버스 등 고용량의 좌석버스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2〉 고용량 버스 사례



바이모달트램(LA Orange Line)



2층버스(세종시 2층버스 체험행사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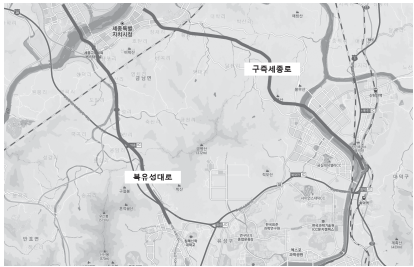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안내체계가 미비하여 대전 및 세종시를 방문하는 이용객이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역, 오송역, 조치원역, 세종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하도록 정류장, 운행간격, 소요시간 등의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도로교통체계 개선

대전과 세종간의 주요 광역도로는 북유성대로와 구즉세종로가 있다. 두 도로의 1일 통행량은 약 113천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통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량 증가에 따라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시 시내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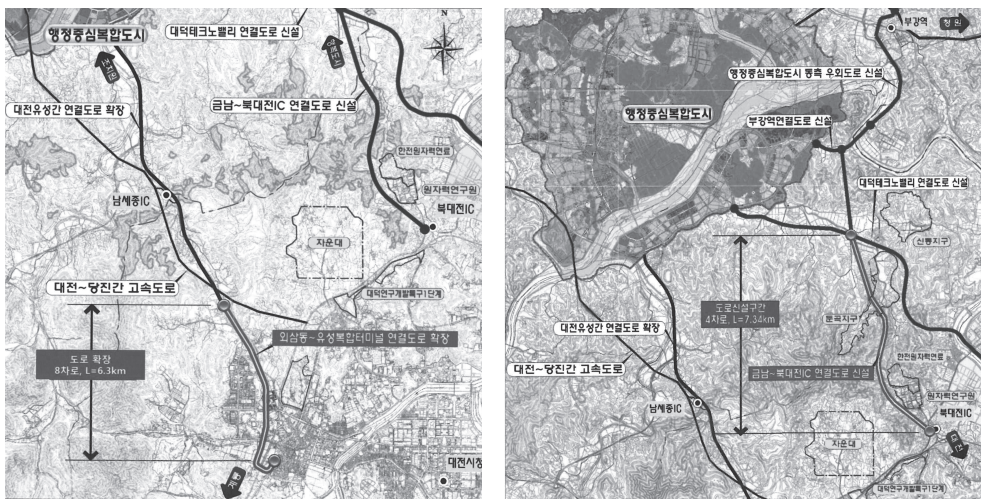
에서 교통혼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내구간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우회도로망의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로는 도로건설 재원의 마련이 어려우므로 도로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수요관리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표 4〉 대전-세종 광역도로 통행량 현황(대/일)

구분	계	대전방향	세종방향	광역도로 노선도
북유성대로	80,878	40,391	40,487	
구즉세종로	32,535	16,477	16,058	
계	113,413	56,868	56,545	
비고	교통량 관측지점 북유성대로 : 외삼네거리 구즉세종로 : 둔곡터널			

자료: 대전광역시 ITS센터 데이터웨어하우스

〈그림 3〉 대전-세종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4),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3.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의 통합운영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이동할 때 택시는 요긴한 교통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두 지역의 택시는 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할증 요금도 과다하게 많이 나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표 5〉 대전 및 세종 택시요금체계

구 분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15km/h 이하주행)	심야요금 (0시~04시)	사업구역 밖 요금	비 고
대 전	2Km까지 2,800원	140m당 100원	34초당 100원	20% 할증	20% 할증	
세 종	1.5Km까지 2,800원	105m당 100원	34초당 100원	20% 할증	20% 할증	

택시는 일반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거나, 심야에 운행하게 되면 할증이 붙는다. 대전에서 출발하는 택시의 경우 저녁 12시 이후 두 가지 할증에 대해 중복할증을 하지 않고 한 가지에 대해서만 20%까지 할증을 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12시 이후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갈 경우 시외할증 20%에 심야할증 20%를 부과하여 최고 40%까지 할증되는 문제점이 있어 택시이용을 많이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지자체간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대전-세종 지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하여 동일구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택시의 운송수입금 감소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으나, 대전 및 세종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택시요금을 줄이기 위한 대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한편 대전과 세종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과 세종시가 각각 따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불편이 많은 실정이다. 대전에서 세종시로 통행하는 경우 대전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세종시로 갈수 있으나,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되돌아 올 때는 장애인콜택시를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지역 교통약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표 6〉 대전 및 세종 장애인콜택시 현황

구 분	휠체어차량	일반택시차량	계	비 고
대 전	82대	70대	152대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세 종	10대	-	10대	세종지체장애인협회

4. 교통안전 향상

대전과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교류가 활발해야 하며, 통행함에 있어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대형차의 유입 등으로 타 도시에 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두 도시 모두 보행자 및 고령자 사고 비중이 높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표 7〉 대전 및 세종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 전	인 구	1,524,583	1,583,811	1,531,809	1,518,775
	교통사고 사망자	123	92	100	97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8.07	6.00	6.53	6.39
세 종	인 구	113,117	122,153	156,125	210,884
	교통사고 사망자	14	21	20	19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12.38	17.19	12.81	9.01

자료: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5. 공유교통수단 확충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시 모든 지역에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으나,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재정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역을 승용차 없이 통행할 때에는 매우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 및 방문객의 요구(needs)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유교통(카 셰어링)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세종시의 대중교통체계는 아직 완숙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문제, 가정문제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이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유교통은 이러한 대중교통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교통서비스가 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일부 이용객 밀집지역에서 카 셰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원의 모색이 필요하다.

Ⅲ. 나오는 글

대전과 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반 교통여건을 양호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대전과 세종의 교통여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두 지역의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은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3), 충청권 광역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4),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 대전광역시(20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의 공동 지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환경정책 제안

7장

정 환 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재 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은 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 충 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대전 · 세종의 공동 지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환경정책 제안

정 환 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재 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은 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 충 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DAEJEON
SEJONG
FORUM

I. 서론

세종시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역의 역할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하였으며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서 최근 인구 2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의 이동보다는 인접해 있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전시의 고민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시가 성장해 가면서 서울 인근의 위성도시들이 동반 성장을 했듯이 세종시의 성장과 함께 주변에 있는 대전을 비롯한 청주, 공주, 천안 등의 인접한 도시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두 도시간의 견제나 경쟁체제를 가속화하기 보다는 상생을 고민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역생활권이란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군단위로 도시공간을 설정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 문화 · 복지 · 환경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능적으로 연계가 강한 대전시와 세종시도 공동의 지역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져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년)은 국내외 환경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국민의 환경수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개발을 반영하여 국가환경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보전·이용·관리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을 비롯한 여러 환경관련 문제점들은 원인과 피해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산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책임소재, 방지 및 문제해결에 대한 비용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한 여러 현안 문제는 단순히 한 도시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환경 이슈가 될 수 있는 물, 폐기물, 생태환경과 최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도시농업에 관해 대전시와 세종시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수도관리 효율화를 위한 상수도사업자 공동운영 방안

1. 배경 및 개요

도시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자면 수돗물이 그 중 하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돗물 공급형태별로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로 나누게 되는데 대전시는 지방상수도, 세종시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규모가 작거나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균일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풍부하고 깨끗한 상수원, 충분한 시설용량의 정수장 및 수돗물의 소비처를 가지고 있다면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보다 갖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방상수도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 수도사업의 재정상태 악화
- 생산원가 및 요금의 지역편차 발생
- 수도사업의 책임경영 및 전문성 확보 곤란
- 수돗물 불신 증대
- 수도사업에 대한 개방 압력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광역화 물산업육성정책에 맞춰 대전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물공급에 대한 생산성 향상 및 물론 중부권 대표 수도사업자로서 기틀 마련 및 경쟁력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수도사업자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수도사업자 현황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2개의 수도사업자 중 급수인구가 30만 이하의 영세 수도사업자가 81%(131개)를 차지하는 등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이상의 급수인구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와 통합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1〉 전국 수도사업자 급수인구 현황

급수인구	10만 미만	10만~30만	30만~50만	50만 이상
사업자 수 162개	97개(60%)	34개(21%)	11개(7%)	20개(12%)

2) 한국수자원 중심의 통합위탁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 지방상수도 시설을 수탁·관리하는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18개 자치단체 수도시설)이며, 2004년 논산시의 수도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한 이후 그 대상을 확대하여 18개 수도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로 수도사업을 위탁한 지자체와 지속적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지자체의 직영 운영시보다 위탁을 통한 사업에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시설 위·수탁계약을 맺은 전국의 18개 지자체들이 환경부 주관 합동토론회를 열은 바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로 인해 지방상수도 운영계획이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3) 지방상수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지방상수도는 발생하는 일반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 수익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상수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투자규모는 하수도의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선출직 단체장의 한계로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임기동안의 사고예방에 치중하여 새로운 경영 및 기술도입에 소홀하며, 비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곳도 51곳에 이른다. 더불어 순환보직 및 유지·보수 중심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수돗물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3. 지방상수도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

1)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방상수도 영세성 극복

지방 상수도 사업자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방상수도의 영세성으로 인한 만성적자 및 품질 저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수도 운영 효율성 향상 및 관리인력 감축 등에 따른 경제성 증가가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로 전문인력 및 전문기술의 확보가 가능해져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2) 지자체간의 급수체계 조정으로 수도시설의 중복, 과잉투자 해소

시·군별로 자체 수원지, 자체 생산·공급구조를 갖추어야 하지만, 수도시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인근 지자체간의 급수체계 조정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중복투자를 해소할 수 있다.

3) 수돗물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자체별 재정건전성 및 관리능력에 따라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는 통합운영에 한정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요금통합까지 실시하여 통합권역 내에 요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4. 대전, 세종의 수도사업 운영 통합

현재 세종시가 대전시가 생산한 수돗물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다. 대전시는 풍부한 수자원의 적절한 활용,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중부권 수도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종시는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 통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의 대폭절감, 보다 저렴한 수도요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통합운영 단계를 거쳐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1단계(운영통합)

1단계는 운영통합 단계로서 시설운동을 통합·관리하는 통합단계이다. 대상 시설은 가압장과 배수지로 한정하며, 정수장, 관로, 계량기 등은 통합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러한 시설관리는 인력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게 되는 단계로 시설의 통합관리로써 인력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원가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2) 2단계(시설통합)

2단계는 시설통합의 단계로써 정수 공급-관리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1단계 통합시설에 추가하여 정수장, 관로, 계량기를 추가로 통합관리시설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러한 통합은 급수체계 조정 및 시설물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통합 관망관리를 통하여 유수율을 향상하며, 시설통합을 기반으로 대전-세종시가 동일한 수도물가를 산정하여 적용하게 되는 단계이다.

3) 3단계(요금통합)

대전-세종시 수도사업의 완전통합 단계로써 조직, 시설, 정책, 요금에 있어서 완전한 단일권역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2단계까지는 시설에서의 비중이 컸었지만, 3단계는 시설을 넘어 정책, 조직, 요금 등 수도관련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통합이다.

Ⅲ. 대전·세종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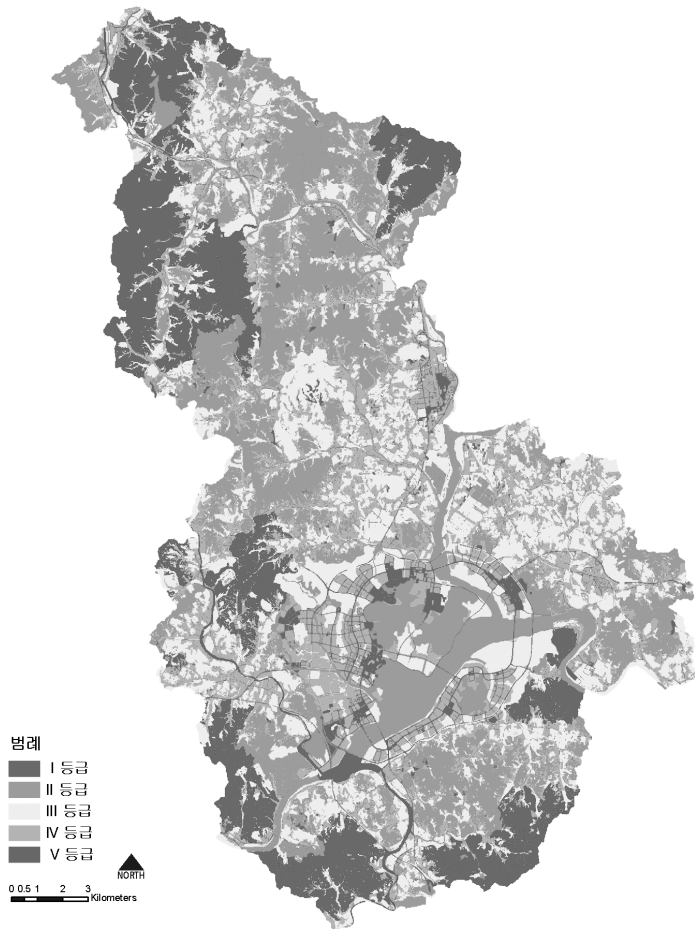
1. 국내 생태자료 구축 및 활용 현황

우리나라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전국자연환경조사를 5년마다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자연도를 구축·갱신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1999년 대구광역시 수성구(개인연구)를 시작으로 서울시(2000), 성남시(2004), 광양시(2006), 시흥시(2007), 충남 15개 시·군(2009~2014) 및 세종시(2011) 등에서 개발 위주의 도시계획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오톱 지도(도시생태현황도)를 구축한바 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지역 전체에 대한 비오톱지도 구축이 2018년 완료 예정이고, 서울시는 지속적인 갱신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도 2016년 11월 현재 도차원에서 비오톱지도 갱신을 위해 15개 시·군 각각에 대해 50%의 사업비를 모두 지원해준 상태이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비오톱지도 작성의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 대전과 세종의 생태자료 구축 및 활용 현황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차 자연환경조사(2012~2014)에서는 자연

비오톱등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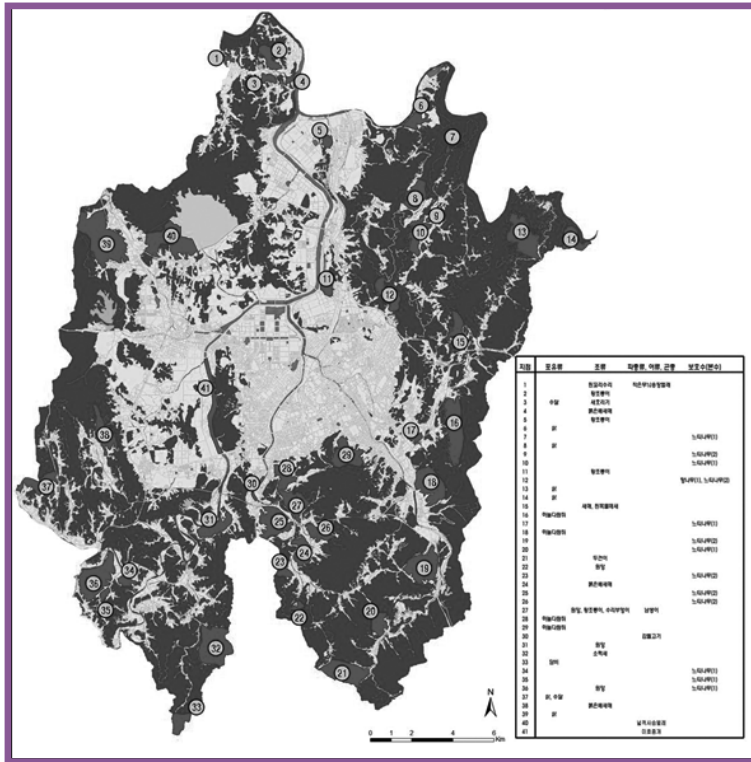


〈그림 1〉 세종시 비오톱 최종등급 결과도(2011. 12. 연기군 당시 세종시 행정구역 반영)

환경조사와 더불어 중분류 수준의 비오톱지도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깃대종(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을 선정하여 정밀 모니터링과 생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어, 대전의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비교적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의 경우 2012년 7월 특별자치시 출범이전까지 충남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 제시한 충남광역생태네트워크(2007년)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세종시는 충남지역과 연계된 광역산림축 및 광역하천축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자연환경 관련 다양한 법정계획 수립을 통해 야생동물,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다각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세

종시는 연기군 당시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2011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지금도 많은 개발계획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2〉 대전 비오톱지도(중분류) 및 특별 보호지역 분포도(대전광역시 2014)

3. 대전과 세종 자연환경 자료의 통합관리

대전시는 2회에 걸친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대전시에 분포하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기초 조사 및 DB 구축 등 지속적인 자료 축적에 큰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세종시의 경우도 산림생태축 및 하천생태축, 비오톱지도 구축 과정에서 축적된 야생동물분포와 현존식생분포, 토지이용현황 등의 현장조사 자료를 GIS DB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전과 세종은 자연환경 기초자료 구축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기초자료의 양적 · 질적 · 공간적 범위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적으로도 경계를 접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이러한 자연환경 기초자료를 상호 활용하기에 이미 유리한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통합관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임이 분명하다. 또한, 기초자료 통합관리는 유동적인 자연환경 및 공간을 다루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기초자료 통합관리를 통한 대전·세종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실현

한편, 세종시는 충남의 광역적 차원에서 광역산림축 및 광역하천축을 설정한바 있으며, 세종시 자체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산림축 및 하천축 등을 설정하였지만 그 역시 구체성과 지역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5년 전에 작성된 비오톱지도를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지금의 도시공간에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현재 갱신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상태이다.

대전시의 경우도 산림축과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일정 수준 작성되어 있지만 중분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활용성은 낮고 정밀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즉, 대전시와 세종시는 현재 기초자료의 갱신과 자연환경계획의 지역성을 재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대전시와 세종시는 기초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자연환경 관련 기초자료 구축 및 계획은 더 이상 개별적이 아니라 두 지역의 통합적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최종 목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1.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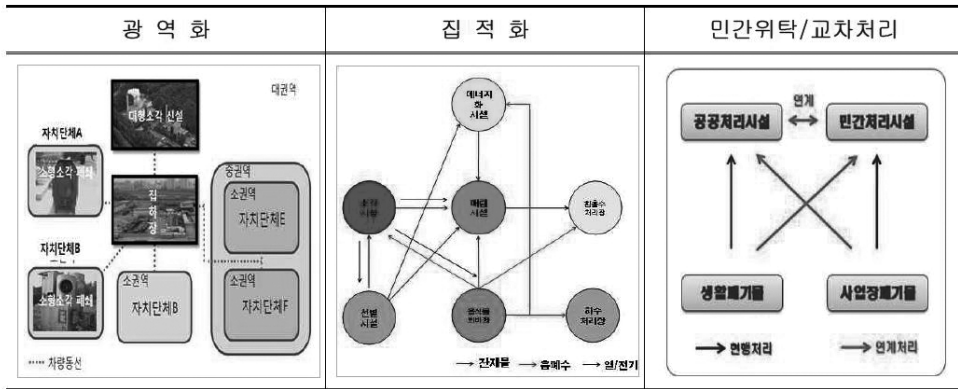
환경부에서는 2011년에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증가하는 현상을 조정하고 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에너지화 확대, 노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동안의 폐기물시설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설치 및 운영되어 있어 중복투자, 사업지연, 부적정 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 정책에 있어 감량·재활용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한 양적 확대의 점진적 둔화와 폐자원 에너지화 대책 추진, 온실가스 저감 정책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 및 방법의 다양화 등의 여건변화, 지역간·분야간 연계처리 미흡 및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장기 최적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증장기 최적화의 주요내용은 232개 시군구 행정구역단위를 79개 중권역으로 구분하여 중권역 단위로 최적의 폐기물 처리 및 시설설치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으로 인하여 연간 약 3,740억 원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운영비가 절약되며 폐자원 에너지화 등의 신규투자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매립지 사용연한 증가와 약 9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의 개념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과정의 환경성, 경제성 및 기술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최적화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도 권역 내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대형화·집적화
- ② 폐기물을 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및 병합처리
-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적 고도화 및 수명연장
-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율 제고 등을 위한 최적화 기술의 적용
- ⑤ 폐기물처리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처리시설의 활용(위탁처리)
- ⑥ 유해하지 않은 생활계와 사업장계 폐기물의 교차처리



〈그림 3〉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방법(환경부, 2011)

3.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사례

국내에서 추진 및 운영중인 최적화 시설은 전처리시설 3개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개소, 소각시설 4개소 등이 있으며, 이 중 소각에너지화 시설은 현재 이천 동부권, 양주시 광역, 전주 시 광역, 파주시 광역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

〈표 2〉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사례 비교

구분		시설용량 (톤/일)	해당 지자체	사업비 (억원)	사업 기간
전처리시설	수도권 매립지	200	수도권매립지 반입대상 생활폐기물	260	2006~2009
	영주시	200 (음식물 60)	영주시, 예천군	380	2008~2010
	나주 혁신도시	전처리 540 보일러 280	나주시, 순천시 목포시, 화순군 구례군, 신안군	2,910	2008~2012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진천 음성	소각 50 매립 43만m ³ 재활용 15	진천군, 음성군	440	2007~2010
소각시설	이천동부권	300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970	2005~2008
	양주시광역	200	양주시, 동두천시	820	2004~2008
	전주시광역	400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940	2003~2007
	파주시광역	200	파주시, 김포시	430	1999~2003

환경에너지종합타운(대전광역시) 타당성 조사 보고서 (2009) 환경부

4. 대전·세종 폐기물처리 운영 방안

대전시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2014년에 1,451톤/일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다. 2014년 배출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수거한 양(재활용품 및 음식물류)을 제외하고 가연성이 89.3%, 불연성이 10.7%였다. 재활용품 배출량은 496.7톤/일로 2013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음식물류 배출은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세종시의 경우, 2014년 생활폐기물은 120.2톤/일 배출하였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폐기물처리는 매립이 28.5톤/일, 소각 34.8톤/일, 재활용이 56.9톤/일로 가장 많았다.

대전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여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4년에 한국환경공단과 대전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및 슬러지 연료화시설과 RDF 전용보일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고품연료화 시설과 고품연료 보일러를 활용하여 에너지(발전 및 증기)를 회수하는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슬러지에서 에너지를 회수화하는 슬러지연료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에너지종합타

운 시설 조성으로 소각이외에는 매립 일원화였던 폐기물 처리방식이 전환되며 단순 매립에서 폐기물을 선별하여 협잡물만이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 매립연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3년에 세종시 고운동 일원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준공하여 향후 20년간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폐기물 자동수거 시스템을 통해 모여진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연료화시설로 보내져 고품연료로 만들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와 혼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처리 중권역 설정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를 따로 구별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자체에서 폐기물 처리관련 시설을 신설하여 대전 · 세종의 '폐기물처리 최적화'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다만,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전시 매립지 매립연한의 한계, 소각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점과 두 도시간의 지역적 근접성을 생각할 때 '폐기물처리 최적화'가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따라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도시간 폐기물처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안전한 먹거리 창출을 위한 도농복합형 농업시스템 구축

1. 상생이 쉬운 도시농업의 필요성

대전시와 세종시는 도시공간적으로 연접하여 있으며, 행정구역만 다를 뿐 하나의 도시라고 하여도 크게 이견이 없을 듯하다. 또한 두 도시간의 연결지는 도시도 아닌 것이, 전형적인 농촌도 아닌 어중간한 도농복합지역과 자연녹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도시공간에서 도시의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인에게 도시농업 혹은 생태농업을 위한 공간마련과 서비스 제공이 두 도시간의 상생의 지름길로 이어진다.

한편, 도시에서의 도시농업은 먹거리 창출이라는 기본적 수요에서 탈피하여, 도시농업 자체를 여가활동으로 즐기거나, 혹은 안전한 푸드에 대한 욕구, 심지어는 농업활동 자체에서 가져오는 마음의 안정 등 많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도시농업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 확보 및 퇴비와 편의시설 등의 물리적 요소도 필요로 한다.

2. 상생적 도시농업을 위한 고려사항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도시농업은 아파트 혹은 빌딩 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농촌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이때, 도시의 문화적 삶에 익숙한 이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도시농업의 공간에도 필요하다. 예컨대 화장실 및 상수도시설 등이다. 이밖에도 도시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퇴비적치장, 쓰레기장 등도 필요로 한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도시에서의 생활습관 때문에 도시텃밭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시설이 있어야만 도시농업이 성공할 수 있다.

2) 초보자를 위한 농기구센터

도시농업은 손으로만 할 수 없다. 무엇인가의 도구를 이용하여야만 생산성과 즐거움과 도시농업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도시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의 입장에서는 낫과 쇠스랑 같은 간단한 농기구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초보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농기구 구입사정도 녹녹치 않은 않을 것이다. 또한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로 접하는 초보입장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에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농업으로 하는 공간적 장소에 세종시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농기구 임대센터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스마트 도시농업시스템 구축

도시농업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도시농업에 임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으면 곤란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소유 도시텃밭, 세종시와 대전시가 임대하는 1년단위의 도시텃밭, 혹은 지인을 통한 임대텃밭 등의 형태로 농업지를 구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초보의 도시농업인 입장에서는 도시농업을 접하고 싶어도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전시와 세종시의 접경지역에는 도시인들이 농지구입만 한 채, 묵혀두는 휴경농지 등이 많을 것이다. 또한 자기소유의 넓은 텃밭을 1인 혼자 농업행위가 어려운 농지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도시농업인이든 다년간 경험이 있는 도시농업인이든,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농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 휴경농지와 시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 도시농업시스템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휴경농지를 유료로 임대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유희지 임대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퇴비마련에 의한 도시농업 질적 제고

도시농업은 초보농업인의 간절한 마음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흙속의 유기물과 무기물이 풍부한 질 좋은 토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질 높은 퇴비생산도 고려의 대상이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는 충분한 부숙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퇴비공정규격에 만족하는 범주이어야 한다.

더불어, 도시농업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퇴비를 만들어 쓸수 있도록, 간이퇴비장 마련 등도 필요하다.

5) 도시농업 상생을 위한 소재개발

도시농업 활동은 개인의 먹거리 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여가활동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농업에서의 생산물을 많은 도시인에게도 제공 할 수 있는 도시농업장터 마련도 고려의 대상이다.

6) 농업과 도시인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

도시농업은 경제적 목적을 두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농업은 여가활동 및 안전한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대부분 주말 등을 이용하여 활동한다. 따라서, 공공장소 혹은 공동단위에서 행해지는 도시농업은 농경지 임대와 농기구, 퇴비구입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무상이 어렵다면 저가제공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Ⅵ.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2012년 출범된 세종시의 도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인접하고 있는 대전시의 인구유출 및 경제 침체,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가 끊임 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두 도시 간 견제 및 잠재적 경쟁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역 경제발전 위주의 두 도시 간 경쟁적인 도시 개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는 이 지역 시민의 행복한 삶과 각종 환경자원의 보호·관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도시 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노력은 시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개원함에 따라 환경과 관련한 여러 현안 문제와 향후 중장기 대책 수립에 있어서 지역 수준이 아닌 통합적이고 광역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돗물과 관련한 운영·시설·요금의 통합은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활용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에 있어서 두 도시 간 상생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기물처리 최적화는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어 시급한 문제는 아닐 수는 있으나,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전시 매립지 매립연한의 한계 및 소각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도시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은 최근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등과 맞물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했던 과거 충남 연기군의 경우 다양한 법정계획 및 광역생태네트워크, 도시생태현황지도 등이 구축되어 있고, 대전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자연환경조사 및 일부 비오톱지도 구축이 이루어져 있어 생물 및 무생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도시공간의 변화로 인해 기존 자료의 갱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세종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은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도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이다.

또한, 최근 도시인들의 먹거리 창출 및 여가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경우도 두 도시 간 연결지인 도농복합지역 및 자연녹지를 활용하여 공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초보자 중심의 농기구센터 및 스마트 도시농업시스템 구축, 퇴비마련에 의한 도시농업의 질적 제고 및 각종 소재개발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기대효과

사회 · 경제적 특성 및 지향점이 서로 다른 양 도시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목표는 향후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향후 각종 환경 과제에 대한 적절한 상호협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지자체는 수많은 환경 현안에 직면한다. 특히 국토의 중심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와 인근의 대전시는 더욱더 각종 환경 쟁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환경과 관련한 두 도시 간 협력 모색 노력은 다음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환경관련 각종 정보 공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환경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통합관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

수도 사업이나 광역생태네트워크 등 일부 가능한 환경 이슈에 대한 통합관리는 지리적 · 경제적 · 생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3) 환경자원 관리의 양적 · 질적 동반성장

각 지자체의 환경자원 관리는 지리적 ·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단점 혹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도시의 통합적인 환경자원 관리는 각 지자체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여 양적 · 질적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 2014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권 수도사업자 기틀마련을 위한 경쟁력강화 전략수립 연구보고서, 2012
 - 연기군, 연기군 비오름 지도, 2011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2013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4
 -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15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2011
 - 환경부, 환경에너지종합타운(대전광역시) 타당성 조사 보고서, 2009
-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59호

발행일 2016년 12월 15일

발행인 유재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 바01040

주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제작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Tel.042-633-7800)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과제 제안 안내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시민참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